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기후변화의 인식유형: Q방법론을 중심으로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이 승 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기후변화의 인식유형: Q방법론을 중심으로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이 승 한

기후변화의 인식유형: Q방법론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윤 순 진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이 승 한

이승한의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위 원 장 전 상 인 (인)

부위원장 박 순 열 (인)

위 원 윤 순 진 (인)

국문초록

이 연구는 현재의 기후변화정도의 심각성에 대처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든스의 역설’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응모습과, 인식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해 매년 나쁜 성적들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대응모습에서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리고 인식조사의 단편적인 높은 수치에만 집중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이 배제되고 합리적 선택이론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 방식들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위험의 사회구성주의와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인식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Q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5명 응답자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전사회대상 생활양식전환 추구형’, ‘소집단주도 현실개혁 추구형’, ‘개인중심 에너지 전환 추구형’, ‘원인자중심 시장기반 대응 추구형’의 네 가지로 유형화되었다. 각 인식유형들은 크게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 대응 수단’, ‘기후변화 대응 주체’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합의 진술문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인식유형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와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후변화는 실제적인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인식유형은 원자력 발전을 기후변화 대응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다. 각 인식유형의 설명요인으로 문화이론에서 제시한 네 가지 문화적 편향을 사용한 결과 문화적 편향이 기후변화인식의 설명요인으로서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인식유형별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대해 시사점들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단일한 방식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유연함을 가져야 하는지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Q방법론의 가설추론 논리에 따라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유형에 대한 다섯 가지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 기후변화, 기후변화 인식, Q방법론, 문화이론

◆ **학 번** : 2012-23802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 3 절 연구의 내용과 대상	7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8
1. 기후변화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8
2. 문화이론과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10
3. 기후변화인식의 유형화와 비교	13
4. Q방법론과 환경인식, 기후변화인식	14
5. 선행연구의 한계와 연구방향	15
 제 2 장 이론적 배경	17
제 1 절 위험의 사회구성주의	17
제 2 절 문화이론	20
1. 문화이론의 개념	20
2. 문화적 편향, 자연관	23
제 3 절 문화이론과 위험의 사회구성주의	29
제 4 절 Q 방법론	31
1. Q 방법론	31
2. 가설생성의 논리	32
3. Q 방법론의 과정	33
 제 3 장 연구설계	38
제 1 절 기후변화 인식 유형의 측정: Q방법론	38
제 2 절 문화적 편향의 측정	44

제 3 절 인식유형별 설명과 특성분석	45
제 4 장 분석결과와 논의	47
제 1 절 인식유형의 추출	47
제 2 절 인식유형의 특성	53
1. 합의적 진술문과 논쟁적 진술문	53
2. 인식유형별 특성	54
제 3 절 인식유형의 의의와 특성의 설명	68
1. 인식유형의 의의	68
2. 인식유형별 전형적 응답자	70
3. 인식유형과 문화적 편향	78
제 4 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와 가설의 제시	83
1. 기후변화 인식의 다양성과 시사점	83
2.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유형에 대한 가설	88
 제 5 장 결 론	90
제 1 절 요약과 연구의 함의	90
1. 요약	90
2. 연구의 함의	92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언	93
1. 연구의 한계	93
2. 후속연구 제언	94
 참고문헌	97

<표 목차>

<표 1> 망과 집단에 의한 네 가지 문화유형	21
<표 2> 진술문의 주제별 분류	39
<표 3> P 표본(P-sample)의 분류	42
<표 4> P 표본의 구성	42
<표 5> 인식유형의 요인적재치와 설명력	49
<표 6> P 표본의 각 유형별 요인 적재치	49
<표 7> 개별 진술문에 대한 인식유형별 점수	51
<표 8> 합의적 진술문 & 논쟁적 진술문	53
<표 9> 유형 A의 대표적 진술문과 Z-score	55
<표 10> 유형 A와 타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Z-score	58
<표 11> 유형 B의 대표적 진술문과 Z-score	59
<표 12> 유형 B와 타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Z-score	61
<표 13> 유형 C의 대표적 진술문과 Z-score	62
<표 14> 유형 C와 타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Z-score	64
<표 15> 유형 D의 대표적 진술문과 Z-score	65
<표 16> 유형 D와 타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Z-score	68
<표 17> 인식유형의 의의	69
<표 18> 인식유형별 전형적 응답자	70
<표 19> 인식유형간 관점비교	87

<그림 목차>

<그림 1> The myths of nature	26
<그림 2> Q 분류표 (진술문 46개)	44
<그림 3> 연구모형	46
<그림 4> 요인별 고유값의 스크리 도표	48
<그림 5> 응답자의 문화적 편향	79
<그림 6> 유형 A에 속한 응답자들의 문화적 편향	8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제1실무반(Working Group 1)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기초(physical science basis)에 대한 제5차 평가보고서(the Fifth Assessment Report, AR5)를 2013년 9월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1880년 ~ 2012년 사이 평균 0.85℃(최소 0.65 ~ 최대 1.06) 상승하였고,¹⁾ 해수면은 1901년 ~ 2010년 사이 평균 19cm(최소 17 ~ 최대 21)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기온은 평균 3.7℃, 해수면은 평균 63cm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virtually certain 99 ~ 100%),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증가가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extremely likely 95 ~ 100%)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70년대 말부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1992년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채택하고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그 후 2005년 2월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2008년 OECD는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를 내고 조세와 배출권거래 등의 시장기반 도구 활용, 재정이나 경제 무역 등 모든 분야의 정책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 세계화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친환경적 기술 축진을 환경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사회는 향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자는데 합의하였다.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학적·경제적 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려는 움직임을

1) 이는 2007년 발표한 제4차 보고서 내용인 최근 100년간(1906년 ~ 2005년)의 지구평균기온 상승 0.74℃(최소 0.56 ~ 최대 0.92) 보다 높은 수치이다.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제도·기술적 대안들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대응들은 크게 실효성 있는 결과들은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각자가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2℃ 이내로 평균온도 상승을 억제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후변화와 그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7년 환경부의 조사²⁾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3세 이상의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인 97.0%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92.6%의 국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13년의 조사³⁾에서는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해 일반국민의 95.1%, 전문가의 89.0%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배출한 CO2 총량은 2008년 세계 9위, 2009년 세계 8위, 2010년 세계 7위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⁴⁾ German Watch(2013)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58개국 중 50위로 평가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가 없이 기후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미온적인 움직임은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소위 말하는 ‘기든스의 역설(Giddens’s Paradox)’에 빠져 있음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지지하거나 촉구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⁵⁾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식이란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것인데 현재의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높은 수치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이 낮은 것은 아닐까? 기존의 지배적인 기후변화대응 패러다임이 이익 중심의 ‘합리적 선택이론’에 집중할 뿐, 각 국가나 지역, 사회, 개인들의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분

2) 환경부(2007), “기후변화에 따른 전국민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3) 환경부(2013), “2013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4) European Commission &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2012), “Trends in global CO2 emissions”

5) ‘기든스의 역설’이란 앤서니 기든스(2009)가 ‘기후변화의 정치학(Politics of Climate Change)’이란 책에서 제시한 말로 아무리 무시무시한 위험이라도 직접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가깝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추상적이고 모호한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위기, 사고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⁶⁾ 즉, 현실세계의 각기 다른 사회문화를 기반으로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나 개인들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 인식의 구체적인 성격이라든가, 사람들이 느끼는 심각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기후변화는 항상 불확실성(uncertainty)을 수반한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현 세대의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 과학은 직접적인 관찰과 실험에 주로 의존하는 경성과학(hard science)과는 거리가 있어서 그만큼 불확실성의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가능성 또한 높은 편이다(윤순진, 2009). 불확실성이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 조사, 판단, 평가의 여러 차원에 다양한 주장이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윤순진, 2013). 그러므로 기후변화는 인식에서부터 대응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인식론적 측면에서 다른 가치관과 사회적 상황 등을 바탕으로 한 여러 집단이나 개인들은 기후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며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양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유연성을 가지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기후변화문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대표적인 환경위험(environmental risk)이다. Beck(2006)과 Beck & Levy(2013)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으로 만들어진 불확실한 환경위험

6) 기존의 '합리적 선택이론'은 단일의 선형(linear) 선호함수에 기반을 두어 모든 사회나 개인이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같은 반응행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는 다원적 가치관을 무시하고 있어 현실세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사결정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globalized manufactured uncertain environmental risk)에 대한 시민 인식의 확산은 코스모폴리탄 커뮤니티(cosmopolitan community)에 대한 인식으로 귀결되어 구시대적인 민족국가단위의 접근을 넘어 세계적 해결방안의 모색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윤순진, 2013).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해결방안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기존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정책과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제도·기술적 효율성과 실효성에 집중해왔다. 배출권거래시장을 도입하였을 때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 탄소저감장치 또는 탄소포집기술 등에 대한 논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경제적 이득이나 제도적 변화 등에 대한 논의와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 선택이론을 바탕으로 둔 정책과 연구들은 지역의 경제적 상황, 자연 환경적 상황들에 대한 고려를 일부만 포함하고 있을 뿐, ‘비용편익으로 조정되지 않는 근본적 문화차이의 존재,’⁷⁾ ‘이해관계자들이 가진 다원적 선호의 수용,’⁸⁾ ‘이익의 기원에 대한 설명’⁹⁾ 등은 고려를 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근본적인 문화의 차이, 다원적 선호, 이익의 기원에 따라 사회나 개인은 기후변화라는 환경위험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 또한 같은 경제적 유인수단이나 정책, 기술에 대한 수용성 역시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나 개인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또 다른 방향의 선행연구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여부 즉,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환경부, 2007; 오도교 외, 2010; 한현진 외, 2010; 김지현

7) Kim(2003)은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환경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많은 갈등들은 계속적인 유인제공, 비용감소라는 비용편익체계의 합리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불용상태(irresolvable state)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합리적 선택이론은 이와 같은 불용적 갈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불용적 갈등은 선호와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fundamental difference)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김서용, 2005)라고 하였다. 기후변화문제 역시 환경갈등문제와 동일하게 선호와 문화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8) Wildavsky(1992)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통해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도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9) 이익 중심적 접근은 설명방식에 있어 특정집단이 특정이익을 가졌다고 ‘지적(designation)’할 뿐, 이러한 이익이 어디에 근거해서 출발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김서용, 2005)

외, 2012; 송보경 외, 2012; 채희문 외, 2011; 김옥 외, 2013 등). 이에 반해, 집단이나 개인의 기후변화 인식에는 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높은 기후변화 인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후변화정책의 사회내 수용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후변화는 현 인류가 맞이한 가장 대표적인 환경위험이다. Linda Steg and Inge Sievers(2000)는 환경위험 인식과 위험 판단의 차이에 대한 이해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환경위험 관리 전략들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기후변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기후변화에 효율적인 관리 전략들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인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인식한다는 것은 기후변화가 야기되는 원인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 즉 발생 가능한 피해를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대응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를 문제까지 연결되기에 기후변화 인식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될 수밖에 없다(윤순진, 2013).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은 어느 국가들 보다 높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인식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표면적인 인식으로 나타나기까지 인식의 과정과 내용들은 매우 다양한데 지금까지 연구가 되지 않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 높은 인식 수준은 측정하였지만, 그 속은 비어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인식을 형성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기후변화인식은 환경을 이해하는 개념과 믿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개념, 개인의 경험, 불충분한 걱정이나 신뢰, 세계관, 정치적이데올로기, 문화적 요인, 이미지, 가치관, 정보의 여부, 과학자에 대한 신뢰, 개인적 효능감(personal efficacy), 비용과 편익의 균형,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에 대한 믿음 등에 의해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Anthony A. Leiserowitz, 2006; Irene Lorenzoni and Nick F. Pidgeon, 2006; Lorraine Whitmarsh, 2008; Paul M. Kellstedt et. al, 2008; Elke U. Weber, 2010;

Banaszak et. al, 2011; Paul Slovic et, al, 2011).

이러한 여러 요인들 중 이 연구는 기후변화인식의 사회구성주의적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 사고(idea), 가치(value)에 집중하고자 한다. 김서용(2005)은 환경갈등의 원인은 사람들의 정신구조(mental structure)에 이미 내재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주체인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편향, 사고, 가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행위자이자 이해관계자를 모든 개인과 사회로 보고 그 중 일부의 사람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연구대상자들의 기후변화인식에 문화적 편향, 사고, 가치가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Q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가설추론(abductory), 가설발견 논리에 따라 한국인의 기후변화인식 유형에 대한 참(genuine)가설¹⁰⁾의 제시이다.¹¹⁾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사회집단 또는 개인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한다. 둘째, 상이한 인식의 차이는 각 사회집단 구성원이나 개인이 가지는 문화적 편향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인의 기후변화인식과 관련한 참가설을 제시한다. 셋째, 제시된 참가설 증명하기 위한 방안과 기후변화정책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10) 참(genuine)가설이란 임의(ad hoc)가설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Q방법론을 만든 Stephenson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과학의 전통에서는 연역과 귀납의 방법을 사용하는 가설 연역적 경험주의가 과학의 기존 패러다임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연구자는 내적 논리와 일관성이라는 표준적 연역 검증에 부합되는 가설 혹은 이론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이것들을 표준적인 귀납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이다(김홍규, 2003). Stephenson은 이러한 과정에서 Q방법론이 오직 직감이나 생각을 통해 나온 미봉가설이 아닌 관찰과 분석을 통한 참가설을 제시해준다고 하였다.

11) Q방법론은 사회과학 방법론으로서 인간의 주관성을 다루기 위해 양자이론(Quantum Theory)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사회과학에 들여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자연의 본질은 상호작용 속에서 위치와 속도를 달리하는 아원자에 있고 아원자는 그것이 측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위치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측정도구를 갖고 전자를 발생시킬 때 비로소 정확한 위치를 갖게 된다(김홍규, 2008:27-77; 박순열, 2010에서 재인용). 어떠한 특정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 또한 이와 유사한데, 해당 인식은 그것이 관련되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포착하려고 할 때에만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 때문에 Q방법론의 Q를 Quantum Theory의 Quantum에서 따온 것이라고 추정한다(박순열, 2010). Q방법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방법론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나아가야 하는지를 기후변화 인식유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내용과 대상

이 논문은 대표적인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Q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석하였다. 각 인식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요인으로 Mary Douglas와 Aaron Wildavsky가 제시한 문화이론(Cultural Theory)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어떻게 현재와는 다른 기후변화 정책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지 제안하였다.

논문의 전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기후변화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Q조사를 하고, PQMetho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식유형을 구분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Q방법론을 통해 제시된 인식유형들을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인식유형의 특성을 인식유형별 대표 응답자의 심층면담과 구성원들 문화적 편향을 통해 설명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기후변화인식유형과 관련한 참가설을 제시하고, 유형화된 기후변화인식을 검증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상하며, 기후변화인식의 유형별로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모든 개인이자 사회이다. 모든 개인과 사회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 이와 동시에 피부로 느끼거나 생활에 직접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개인과 사회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개인이나 사회가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기후변화인식 차이에 대한 탐색적 성격을 가진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최대한 상이한 인식 유형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인 집단, 운동가 집단, 공무원 집단, 전문가 집단의 네 개의 사회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사회집단의 환경관련성을 기준으로 환경관련성이 높은 집단과

환경관련성이 낮은 집단으로 세분화하였다.¹²⁾ 이들 연구대상은 각기 다른 사회적 관계와 환경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적 편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인지적 여과기(cognitive filter)를 가지게 된다(김서용, 2004). 상이한 인지적 여과기를 가진 연구대상들은 자기 문화적 편향에 따라 동일한 환경적 사실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게 되며, 이는 최종적인 환경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2개의 문항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문화적 편향을 측정하여 확인해 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 밝힌다. 이후 2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위험의 사회구성주의와 문화이론, Q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유형을 보기 위해 어떻게 연구를 설계하였는지 설명한다. 4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분석과 논의를 통해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과 관련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연구함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1. 기후변화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기후변화는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인식된다. 기후변화인식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크게 경험, 신뢰, 정보, 가치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Lorraine Whitmarsh(2008)은 기후변화와 위험 인식이나 대응행동에 홍수와 대기오염 경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영국 남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홍수의 피해를 겪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인식과 대응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대기오염 경험은 기후변화인식과 대응에 큰 영향을 주어 기후변화가 현저한 위협으로 평가하였다. 즉, 경험의 종류에 따라서도 기후변화의 인식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Irene Lorenzoni and Nick F.

12) 연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후에 P표본 설계에서 상술한다.

Pidgeon(2006)은 유럽과 미국에서 실시한 기후변화 인식에 관한 양적분석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복잡과정을 거쳐 개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복잡성은 개인적 경험, 지식, 비용과 편익의 균형,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에 대한 믿음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비해 그 중요성을 낮게 생각하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에 대해 강조하였다. Paul M. Kellstedt et. al.(2008)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의 여부, 과학자에 대한 신뢰, 개인적 효능감(informedness, confidence in scientist, personal efficacy)의 세 가지 요소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위험성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Banaszak et. al(2011)는 mental model을 이용하여 전문가들의 기후변화적응과 관련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적응의 인식은 연구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개념과 믿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개념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이익단체, 공무원, 정치인, 연구자, 미디어, 일반대중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선행연구들 중 기후변화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강조되는 것이 개인이나 사회가 가진 가치관이다. 가치관을 주요 요소로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hony A. Leiserowitz(2005)는 2003년 미국에서 실시한 국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인들의 기후변화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인들은 기후변화를 심각하지 않은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리적으로나 일시적으로 특정사람 또는 특정지역만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얼마나 위험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회의론자에서부터 불안을 느끼는 사람(alarmist)까지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미국인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다양한 국가와 국제적 정책들을 강하게 지지하였고, 탄소세와 같은 정책들에는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위험인식과 정책 선호는 경험적 요소와 이미지, 가치관, 가치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관련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심리적 요소와

사회문화적 요소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W. Kipviscusi & Richard J. Zeckhauser(2006)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정치적 선호가 기후변화의 위험성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있어 행동결정의 성향들은 요술거울(fun-house mirror)와 같다고 하였다. 즉, 응답자들은 그들의 가치에 따라 일부 관찰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대해석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축소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Paul Slovic et, al.(2011)은 설문을 통해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문화적으로 양극화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위험인식 공동의 비극(the tragedy of the risk-perception commons)을 막기 위해서는 과학 커뮤니티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lke U. Weber(2010)는 개인의 경험, 불충분한 걱정이나 신뢰 등이 기후변화를 인식하는데 복잡하게 영향을 주지만 문화적 맥락의 세계관과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기후변화로 인한 사건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기후변화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의 분석방법(Affect-based decisions, Analysis-based decision, Rule-based decisions)을 제시하였다. 세 가지 방법 중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행동을 위해서는 도덕과 사회적 책임에 기초를 두고 있는 Rule-based decisions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인 기후변화인식의 사회구성주의적 접근방식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

2. 문화이론과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연구는 기후변화인식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가치관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개인이나 사회가 가진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 사고(idea), 가치(value)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문화이론(Cultural Theory)을 사용하였다.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사회가 가진 환경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다수 있다. 개인이나 사회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서용(2004)은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환경갈등(새만금 개발사업)이 단순한 이해관계집단 간 이익갈등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문화가치(계층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를 가진 이해관계집단들 간의 문화갈등이라는 점을 각 집단이 가진 문화편향의 차이와 이로 인한 파생적 효과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분석결과 관료집단은 계층주의, 사업자는 개인주의, 지역민들은 운명주의, 시민환경단체는 평등주의의 문화적 편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자연환경, 위험, 과학기술 등과 관련해 각 집단이 가진 파생적 태도에도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서용(2006)은 새만금 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가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문화이론화 Q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비(非)중립적인 사회적 활동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비(非)중립성 역시 전문가들이 가진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편향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가들 역시 그들이 가진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편향에 따라 ‘동일한’ 과학적 사실에 대해 각기 다른 구성과 해석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김서용의 연구들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이해관계집단이라는 한정적인 대상을 통해 분석하였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문화이론에서 제시한 문화적 편향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이는 이해관계집단 간 행동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 연구이다.

비슷한 연구로 강상철, 문경주(2005)는 위천공단 조성갈등사례와 명지대교 건설 갈등 사례를 문화이론과 P.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분석틀로 분석하였다. 두 사례 모두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문화적 편향을 근거로 각각의 연대를 조성하여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문화적 편향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편향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서로의 신념을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정향학습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또한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박종민 외(2005)는 환경가치와 신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초점을 두고 탈

물질주의, 정치이념, 문화편향 세 가지의 상대적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환경가치와 신념에 대한 지지가 주로 문화이론에서 제시한 문화편향에 의해 설명되며 탈물질주의와 정치이념은 직접적인 영향을 일관되게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가치와 신념이 좌-우 혹은 보수-진보의 정치이념이나 독집적인 문화편향과 관련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처방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세계관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Linda Steg와 Inge Sievers(2000)는 환경위험인식과 위험판단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환경위험 관리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문화이론에서 제시한 자연에 대한 신화(the myths of nature)를 바탕으로 자동차 이용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선택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자연에 대한 신화에 따라 상당한 변수들이 인식과 선택, 정책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Nature ephemeral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높은 문제인식과 상관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비슷한 연구로 Susan J. Buck(1989)은 환경자원을 포함한 공공재적 자원(common property resources)을 관리하는데 있어 국가나 지역 등에 따라 다양성을 가져야 하는데,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둔 유형화가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이론과 기후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로 T. O'Riordan, A. Jordan(1999)은 그들의 연구에서 문화이론은 특정 사고의 패턴들이 기후변화 정책과 과학의 해석적인 측면, 정보의 수집, 관련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와 기후변화 논의 패턴에 대한 문화이론간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과 사회 내 제도 사이의 관계특성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인식 역시 개인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편향, 사고, 가치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3. 기후변화인식의 유형화와 비교

연구대상자들의 기후변화인식을 유형화한 연구도 존재한다. Anthony Leiserowitz et. al.(2008)은 2007년 여름 1,98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하여 기후변화와 관련한 믿음, 위협, 원인, 결과 등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시장세분화분석방법인 LCA(Laten Class Analysis)를 통해 응답자를 공통적 반응에 따라 6개의 집단으로 세분화하였다. 세분화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반응을 믿음(beliefs), 정책 선호(policy preferences), 행동(behavior)을 중점적으로 측정하였다. 세분화 결과 6개의 집단은 불안(Alarmed)(19%), 걱정(Concerned)(22%) 경고(Cautious)(20%), 무관심(Unconcerned)(12%), 의심(Doubtful)(16%), 기각(Dismissive)(11%)이다. 그는 이 분석을 통해 유형화되지 않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대중정보캠페인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집단을 비슷한 믿음, 가치, 행동, 필요 등의 기준을 통해 세분화 했을 때 더 효과적인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국 대중의 기후변화인식유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Anthony Leiserowitz(2007)는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진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양적분석연구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다수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각 개인이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행동의 변화를 방해하는지, 어떤 요소들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지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Irene Lorenzoni and Nick F. Pidgeon(2006)은 유럽과 미국에서 실시한 기후변화 인식에 관한 양적분석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복잡과정을 거쳐 개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비해 그 중요성을 낮게 생각하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에 대해 강조하였다. 운순진(2013)은 서울, 북경, 동경 시민들의 위험인식에 대한 양적분석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세 국가 국민들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

식과 위험 인식은 높게 나타났지만, 일상에서 마주하는 위험들에 비해서는 위험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이 어떤 과정과 행위자들의 매개를 통해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외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중의 기후변화(대응정책) 인식 연구는 다수 존재하며 모두 양적연구방법을 기반에 두고 있다(환경부, 2007, 2013; 오도교 외, 2010; 한현진 외, 2010; 김지현 외, 2012; 송보경 외, 2012; 채희문 외, 2011; 김옥 외, 2013).

4. Q방법론과 환경인식, 기후변화인식

Q방법론을 이용하여 환경인식과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인식유형을 구분하고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지만 이 연구에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박순열(2010)은 한국 시민들의 환경관련 인식을 생태시티즌십(ecological citizenship) 논의를 이론적 자원으로 하고, Q방법론을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생태시티즌십을 5가지 유형(생태적 세계 시민주의, 낭만적 풍요주의, 동정적 소비주의, 영토적 개발주의, 피상적 보수주의)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복합적이면서도 이질적인 환경인식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한국적 생태시민과 생태민주주의 논의의 구체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0년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들을 2011년 양적분석(N=714)을 통해 2010년 연구에서 제시된 인식유형과 사회인구학적 변수, 실제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박순열의 연구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발주의, 환경주의의 두 가지로 단순히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얹혀서 매우 복잡한 환경인식의 유형들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J. Wolf et al.(2009)는 Q방법론과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반응을 4가지의 유형(The communitarian, The systemist, The sceptic, The economist)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4가지의 유형 중 3가지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의 행동이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은 행동의 생태적 시민으로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행동을 변화시킬 의사는 있지만, 현재의 사회문화적 규범과 구조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Q-sort 내용과 심층면담 내용을 통해 보여주었다. Bruce W. Dayton(2000)은 정책의 틀(policy frames)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Q방법론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정책 틀의 유형을 3가지(Transcendentailists, Policy Activists, Cautious incrementalists)로 분류하고, 6가지의 기준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각각의 정책 틀과 시각의 차이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방향과 의사결정 방식 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근본적인 요인임을 말하고 있다.

5. 선행연구의 한계와 연구방향

문화이론을 이론적 배경에 둔 연구들에서 기후변화는 위협의 한 종류이거나 환경에 대한 인식 속에서 다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연구의 초점이 기후변화 인식에 있기보다는 위협인식이나 환경인식, 인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가 기후변화 위협을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정책의 선호 이 두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연구들에 비해 기후변화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 기후변화 인식과 관련한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인식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양적연구방법(quantitative analysis)에 집중하여 사람들의 기후변화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기후변화 인식을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의 관계나 환경의식, 경제성장, 환경행동 등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Anthony Leiserowitz(2007; 2008), 윤순진(2013)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기후변화의 인식의 차이를 수치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지만, 다양한 인식과 선호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적연구방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qualitative analysis)인 Q방법론을 사용하여 기후변화 인식을 유형화하고 이들과 각 인식유형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주어진 Q-sort결과와 인터뷰 내용에만 집중하여 인식유형의 특성, 인과관계 등을 분석하여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가설들의 이론적 뒷받침이 약하거나 없다.¹³⁾ 그러므로 가설 검증 시 가설의 기각 확률이 높을 수 있으며 가설의 일반화에도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¹⁴⁾ 아직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는 매우 드물며 특히 기후변화 인식을 유형화한 실증 연구는 아직 없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Q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인식을 유형화하고 인식 차이의 원인을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 편향을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3) Q방법론은 주어진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로 ‘가설을 만드는’, ‘가설을 발견해 가는’ 가설추론적 방법론이다(김홍규, 2008; 12~13).

14) 환경부(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3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인 97.0%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10명 중 9명 이상(92.6%)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보고에 따르면 분야별 환경오염 심각성 정도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산업폐기물(95.8%)에 이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94.0%)를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석함에 있어 ‘위험의 사회구성주의’, ‘문화이론’, ‘Q방법론’의 세 가지의 이론 및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제 1 절 위험의 사회구성주의

‘구성주의’란 전통적인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한 가지 현상을 인식함에 있어 인식 주체의 주관적 상황이 반영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구성주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주의’ 관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구성주의 관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중심으로 실체를 바라보는 반면 사회구성주의 관점은 지식이나 실체의 구성을 상황 속에서 형성된 인위적인 것으로 본다(Schwandt, 1998). 사회구성주의 관점을 통해 실체를 바라볼 때 사람들의 이해는 개인의 생각으로부터 형성되어진 것 보다는 사회라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로 부터 구성된 것으로 본다. 결국 사회구성주의를 통해 접근했을 때 실체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태두리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erger & Luckman, 1996; Burr, 2003, Schwandt, 1998, 2000; 강종구, 2009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구성주의 관점 중 ‘위험의 사회구성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를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대표적인 환경위험(environmental risk)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개인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편향에 따라 다양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인식의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위험’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은 위험을 인식하는 주체와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위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느냐, 또는 인간의 의식에 따라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구성주의에서는 위험을

인식하는 주체가 개인이나 사회이냐에 따라 주관주의와 구성주의로 나눌 수 있다(원길연, 2012).¹⁵⁾

첫째, 위험 객관주의는 위험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위험에 대한 합리성의 척도와 객관성의 척도를 추구한다. 위험 객관주의적 위험 인식은 위험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보험업에서 빌려온 위험 공식을 활용해 산술적인 위험 산정방식을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정이론의 합리적 결정모형을 사용한다. 전자는 위험을 물질적 손실의 발생확률과 손실 강도의 함수($Risk = Probability \times Strength$)로 계산하고, 후자는 위험 척도에 의거해 효용 측면과 피해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 다시 말해서 위험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합리적 결정이론의 피해 기대에 따라 정의되며, 이 피해 기대가 형식적인 위험 척도로 일반화된다. 이렇게 계산된 위험이 이른바 ‘객관적 위험’이며, 이러한 형식적-규범적 고찰방식이 위험 객관주의이다(Kleibelsberg, 1977; Fritzsche, 1986; 노진철, 2010 재인용). 하지만 위험 객관주의는 발생확률이 매우 낮지만 엄청난 규모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몰고 오는 재난에 대해서는 설명력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다(노진철, 2010). 예를 들어 위험 객관주의에서는 원자력발전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낮은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다루어진다. 또한, 위험 객관주의는 사회나 개인에 따라 위험을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둘째, 위험 주관주의 입장이 있다. 위험 주관주의는 위험 객관주의의 위험 산정과 현실의 위험 수용과의 불일치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위험 상황에서 일반인의 현실적인 결정행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위험 주관주의는 인간이 특정한 물질적 위해사건이나 주어진 상황조건에서 어떻게 위험의 크기와

15) 이 연구에서는 노진철(2010)의 분류방법을 기초로 한다. 노진철과 그는 다르게 이재열(2004)은 위험에 대한 인식을 크게 ‘위험 객관주의’와 ‘위험 구성주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위험 구성주의를 위험 객관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데, 위험 객관주의가 위험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에 반해 위험 구성주의는 위험의 실존보다는 개인들이 특정한 현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노진철(2010)은 ‘위험 주관주의’와 ‘위험 구성주의’로 세분화하여 이재열의 위험 구성주의를 보다 세부적이 특성으로 나눈 것인데 위험 인식의 주체가 ‘개인(위험 주관주의)’이나 ‘집단(위험 구성주의)’냐에 따라 각각 개인의 주관적 인식능력과 집단의 문화적 송성에 따라 위험을 달리 인식하고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원길연, 2012 재인용).

속성을 경험하고 평가하는지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위험을 주관적 위험이라고 하고 인지심리학의 다양한 측정방법을 동원한다(노진철, 2010). 위험 주관주의는 위험 객관주의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포기 되었던 여러 평가모형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인지심리학의 개인과 개인의 경험에 대한 집중은 주관적 태도와 효과적 행위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 여기서 위험은 고립된 개인의 태도보다는 집단적인 행위 연관에서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Clarke & Short, 1993; 노진철, 2010 재 인용). 개인이 집단적인 결정에 참여할 때는 개인적으로 결정할 때보다 위험을 더 잘 판단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조건에서는 집단행동이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셋째, 위험 구성주의 입장이 있다. 위험 구성주의는 위험 객관주의가 처한 나제를 조직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위험 인지의 가설을 사회적으로 매개된 위험 인지와 위험 평가의 가설로 대체한다. 나아가 위험 주관주의와는 달리 위험 수용 혹은 거부와 관련해서 개인의 주관적인 결정 행위의 결과를 문제 삼기보다는 수많은 위험 대상 중에서 어떻게 특정한 위험만이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어떤 요소에 근거해 위험에 대한 특정한 견해가 지배적이 되며, 어떤 요소에 의해 견해가 극단적으로 갈라지는지 혹은 논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노진철, 2010). 즉, 위험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인지된다. 인간은 굉장히 많은 잠재적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인지할 수 없으며, 그것 모두 위험으로 인식하지도 않는데, 위험 구성주의 입장은 과학, 정치, 여론 등을 매개로 전달되는 위험 신호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응한다는 관점을 가진다. 위험의 인자와 평가는 광범위하게 정보에 의해 매개되며, 정보가 표현하는 사회적 조건에 강하게 의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험 구성주의는 고립된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 주관주의보다 더 현실적이다(노진철, 2010).

이 연구에서 기후변화인식에 대해 위험의 사회구성주의적 접근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위험의 사회구성주의에 따라 위험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데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어떤 문화적 편향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위험은 사회적으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를 구성

하고 있는 개개인이 어떤 문화적 편향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이들이 구성하는 사회에서 그 위험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기후변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확인 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위험의 사회구성주의는 위험을 여러 사회적 요소의 집단적 구성물로 파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험의 표출 형식이 사회영역의 특별한 속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노진철, 2010). 이러한 사회영역의 특별한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위험의 사회구성주의의 연구들을 주도 하는 것이 ‘문화이론’이다.

제 2 절 문화이론

1. 문화이론의 개념

문화이론의 목표는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려는 데 있으며, 개인이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이 삶의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이나경 외, 2008). 이러한 문화이론은 망-집단 분석(grid-group analysis)로 처음 알려졌다(Mary Douglas 1978; 1982; 1982a)¹⁶⁾. 하지만 최초의 알려진 접근방법은 이론(theory)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1980년대 후반 Wildavsky(1987), Thompson et al.(1990), Douglas(1992)에 의해서 문화를 중심으로 사회적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강조하면서 이론으로 정립되었다(Virginie Mamadouh, 1999).

문화이론에서 문화는 개인의 가치, 신념 감정을 나타내는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태를 의미하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 사회적 관계는 사회성을 강조한 개념이며, 이를 통해 문화이론은 문화의 형성, 유지, 갈등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김서용

16) Mary Douglas에 의해서 창시된 망-집단분석에 의한 접근방법은 문화적 다양성을 다루기 위한 분석도구로서 개발되었다. Douglas는 특히 아프리카 현장연구에서 영국의 문화인류학자들이 얻은 결과물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분석도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급진적 제안을 도출해 냈다. 즉 사회성(sociability)에 대한 망과 집단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 차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차원에 따라 모든 문화를 분류하고,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Douglas, 1978:19; 강상철 외, 2005에서 재인용).

2004). 그리고 이 문화적 편향과 사회적 관계의 독자적인 조합이 삶의 양식(a way of life)이자 문화이다(Thompson et al., 1990).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각각의 사회적 관계 + 각각의 문화적 편향 = 각각의 삶의 양식

(출처: 강성철 외, 2005)

문화이론에서는 문화유형을 계층주의(hierarchy), 개인주의(individualism), 운명주의(fatalism), 평등주의(egalitarianism)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각 문화 유형은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편향에 의한 사회성(sociality)에 의해 결정되며, 이 사회성은 집단(group)과 망(grid)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 차원에 따라 구성된다. 집단과 망에 대해서는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네 가지 문화유형은 각각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편향의 결과이므로 문화유형(cultural type)은 삶의 양식(a way of life)과도 같은 말이라 할 수 있다. 네 가지 문화유형은 <표 1>과 같다.

<표 1> 망과 집단에 의한 네 가지 문화유형

		집단(Group)	
		낮은 집단성	높은 집단성
망(Grid)	높은 망	운명주의(Fatalism)	계층주의(Hierarchy)
	낮은 망	개인주의(Individualism)	평등주의(Egalitarianism)

출처: Thompson, M. et al.(1990)

문화이론은 문화의 구성요소로서 문화적 편향과 사회적 관계간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주관적인 문화적 편향과 객관적인 사회적 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이론의 구성요소로 설정하고 둘간의 균형과 상호작용을 강조한다(김서용, 2004). 문화적 편향과 사회적 관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와 같이 어떤 것이 먼저인가를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된

다. 즉 특정 사회적 관계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정 세계관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관계를 정당화한다는 것을 말한다(Thompson et al. 1990).

Mary Douglas는 언어학자인 Bernstein(1971, 1975)의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녀의 초기 저서인 *Natural Symbols*에서 집단과 망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Douglas는 개인의 사회적 삶에 대한 개입(involvement)의 변동성은 집단과 망이라는 사회성의 두 근본적 차원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집단과 망에 대한 정의와 해석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척도로서 해석되어 왔다.¹⁷⁾ 또한 연구 분야에 따라 집단과 망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Wildavsky(1987)가 제시한 두 가지 질문이 집단과 망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 차원을 이해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두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who am I?)”,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how should I behave?)”이다. 이는 다시 “누구와 상호작용해야 하는가?(whom one interacts with?)”, “어떻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해야 하는가?(how one interacts with them?)”라고 되물어 질 수 있다(Ostrander, 1982; 김서용, 2004에서 재인용). 첫 번째 질문은 정체성의 문제이고, 두 번째 질문은 역할 규정의 문제이다(Wildavsky, 1987:6).

첫 번째 질문은 집단과 관련된 것으로 구성원들이 집단과 관련성을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Douglas(1975)는 개인의 삶이 집단 소속감에 의해서 흡수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며, 집단이라는 사회성의 차원은 구성원의 삶이 사회단위에 편입되는 정도 즉 사회편입의 차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구속력이 강한 경우에는 내부인과 외부인간의 경계가 뚜렷하다. 이 경우 집단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의 요구에 일치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반대로 집단의 소속감과 구속력이 약한 경우에 구성원들은 집단의 압력이나 요구에 매이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형성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강

17) 예를 들어 Douglas는 망에 대해서 고립성, 자율성, 통제와 경쟁성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Mars는 직장 범죄연구(a study of work crime)에서 망의 차원에 대한 요소로 자율성(autonomy), 고립성(insulation), 호혜성(reciprocity), 경쟁성(competition)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고, 집단 차원의 요소로 상호작용의 빈도, 상호관계, 활동의 범위, 집단의 경계 등을 제시하였다(Virginie Mamadouh, 1999).

성철 외, 2005).

두 번째 질문은 망과 관련된 것으로 구성원들의 행태가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s)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이는 구성원들의 삶이 외부적으로 부과된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규제의 차원을 의미한다(강성철 외, 2005). 규제가 강해질수록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좁아지고 특정한 기준의 준수를 요구한다. 강한 망(strong grid)에서는 강한 사회적 규제가 존재하며 개인이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과 범위가 줄어들는다. 따라서 강한 망은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제한하거나 구조화하는 도덕이나 규범을 포함한다(김서용, 2004).

2. 문화적 편향, 자연관

1) 문화적 편향

각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그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공유된 시각은 독특한 집단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편향을 강화시키는 힘이 된다(Thompson et al., 1990). 각 문화적 편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층주의(hierarchy)’는 강한 집단성과 강한 망의 영향을 받는 문화적 편향이다. 즉, 개인의 삶의 양식은 구속력이 강한 집단 소속감과 사회적 규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강한 집단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집단 밖과 안을 구분하는 강한 경계가 존재하며, 개인은 집단으로부터 지지와 정체성을 획득한다. 또한 강한 망의 속성과 결합하기 때문에 대규모적이고 공식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화된다(김서용, 2004).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삶은 외부의 강한 규제와 성별 또는 연령 등과 같은 제도적 계층화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사람마다 다른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더욱 조화로운 삶을 가능케 한다는 제도화된 불평등(institutionalized inequality)을 전제로, 이러한 제도적 계층화가 인간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당연하다고 본다(최성욱, 2007). 즉 권위는 제도화 되며, 전문성과 불공평성은 사회가 조화를 이루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정당화된다. 사회적 이념은 질서를 강조하며 전체를 위한 부분의 희생정신을 장려한다

(강성철 외, 2005).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계층주의와는 정반대로 약한 집단성과 약한 망의 영향을 받는다.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은 개인성, 자율성, 경쟁, 타인에 대한 통제, 창의성을 특징으로 한다. 외부에서 주어진 규제가 없으며, 집단에 대한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개인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김서용, 2004). 계층주의와는 반대로 내부와 외부에 대한 경계가 없으며, 지위나 권위로부터의 구속 또는 제약이 없다. 사회는 시장(market)으로 인식되며 시장 내에서 구성원들이 무한 경쟁을 하듯 사회 구성원들도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 개인들은 서로 경쟁적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며, 경쟁에서 승리한 개인들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개인주의 문화유형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핵심이 된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경쟁의 승패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 개인은 개인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된다. 개인주의에서 유일한 외부적 규제는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개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제이다.

‘평등주의(egalitarianism)’는 강한 집단성과 약한 망의 영향을 받는 문화적 편향으로 집단의 경계가 뚜렷하고, 집단 내부에서 구성원간의 지위는 모호하다. 즉 강한 통합성과 약한 사회적 규정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강성철 외, 2005). 평등주의 집단에서 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은 주로 집단내로부터 오는 지지에 근거한다. 집단정체성에 근거한 이러한 지지는 수직적인 외부 규제가 아닌 집단의 이름 아래 수행되어 통제의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김서용, 2004). 강제성을 가진 권위를 꺼리고 균등한 조건을 추구한다. 이는 개인주의가 추구하는 기회의 평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이 본래 선하게 태어나지만, 시장과 계층제와 같은 사악한 제도들에 의해서 부패된다고 믿는다(최성욱, 2007). 이들은 집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집단의 분열이나 집단 내에서의 추방이 유일한 갈등해결 방안이 된다. 그래서 집단의 통제수단으로 강압성이 없는 도덕률을 내부적 규제수단으로 사용한다(김서용, 2004).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은 개인주의적 맥락과는 달리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한다. 또한 집단계층주의와 달리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개개인은 집단의 모든 다른 사람의 복지

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연대성이 가장 높은 가치이다. 따라서 소규모 집단은 비가시적이고 음험한 영향력에 좌우될 가능성도 크다(Rayner, 1987; 김영평, 1996에서 재인용)

‘운명주의(fatalism)’ 문화적 편향은 낮은 집단성과 높은 망의 영향을 받아 집단의 편입성은 낮으나 구속력을 가진 사회적 규정이 많은 문화적 편향이다. 운명주의 문화적 편향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립과 복종을 특성으로 가진다. 다시 말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으로 주어진 통제와 규제가 존재하고, 인적 또는 물적인 절연과 고립이 존재한다(김서용, 2004). 강한 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이 최소화되어 선택이 자유가 크지 않다. 운명주의 문화적 편향에서는 개인을 묶을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집단이 없기 때문에 운명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집단으로부터 배제된다(김영평, 1996). 그래서 이들은 정치와 같은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체제와 제도로부터 스스로를 배제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집단에 속하지 않고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원자화된 개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와 권력에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한다. 대부분 소외된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수동주의자, 운명주의자들이 운명주의 문화적 편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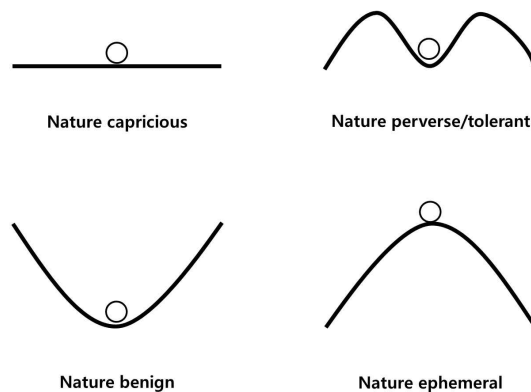
이러한 각각의 문화적 편향을 대상으로 연구를 함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문화유형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접근할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네 가지 문화적 편향을 만들어내는 집단과 망의 차원을 계속적(continuous)인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산적(discrete)인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각 문화적 편향을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는 이산적 시각은 문화적 편향간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적 편향 중 한 쪽만을 고려한 경우이며, 계속적 시각은 문화적 편향간의 중복을 인정하고, 다중자아(multiple self)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편향을 결정하는 집단과 망은 연속된 것으로 보고 사람들이 가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다중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인정하려 한다.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쪽의 문화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네 가지 문화적 편

향 중에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¹⁸⁾

2) 문화이론과 자연(nature)

문화유형의 적용에 있어 가장 설명력이 높게 평가되는 것이 문화유형별 자연에 대한 태도의 분석이다. 이는 문화이론에서 네 가지 문화유형을 기존의 생태학자들이 제시한 자연에 대한 모형을 연계시키면서 분석이 된다.

산림이나 양식장, 목초지와 같은 관리된 생태계들(managed ecosystems)은 연구하는 생태학자들은 이 생태계에 일련의 개입으로서의 관리제도들과 마주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정확히 같은 상황에 대해서 생태계의 안정성에 대한 네 가지 다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서로 다른 관리 제도들을 확인하게 된다(Holling, 1979, 1986; Tmmerman, 1986; Scheartz et al, 1990에서 재인용). 생태학자들이 어떤 경험과 판단의 근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이 네 가지 자연에 대한 신화(myths of nature)는 선과 둥근 공의 조합으로 <그림 1>와 같이 그려진다.



출처: Schwartz & Thompson, 1990

<그림 1> The myths of nature

18) 문화이론에서 연구의 무게 중심이 ‘집단/망’에 입각한 연구에서 ‘문화편향’에 입각한 유형론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집단/망에 대한 연구는 조직경계와 특정맥락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지표개발이 어려운 데 비해 문화편향중심의 연구에 문화편향은 일반적인 설문지법에 의해 바로 직접측정이 가능하고, 맥락에 강하게 구속되지 않으며, 일반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다(김서용, 2004).

‘자애로운 자연(Nature benign)’의 자연관은 지구적 균형(global equilibrium)을 강조한다. 이는 자연은 아주 관대한 것으로 인간이 어떠한 영향을 주더라도 공이 선상의 가장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듯이 자연은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방임의 관리 제도를 추구한다. ‘위태로운 자연 (Nature ephemeral)’의 자연관은 ‘자애로운 자연(Nature benign)’의 자연관과 정확히 반대의 입장이다. 자연은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약간의 영향만 가하더라도 공이 굴러 떨어지듯이 자연은 재앙적인 붕괴를 맞이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의 사람들은 독일의 녹색당의 시각과 같이 생태계의 강력한 보호(great care)를 위한 관리 제도를 추구한다. ‘왜곡되어 관대한 자연Nature perverse/tolerant’의 자연관은 앞의 두 관점과는 상당히 다르다. 자연은 대부분의 영향들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공이 가장자리를 벗어나듯이 일정 이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므로 관리 제도는 평범하지 않고, 일정 이상의 영향을 주는 사건들에 대해 반드시 규제해야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변덕스러운 자연(Nature capricious)’의 자연관은 자연은 알 수 없는 것으로 관리 제도를 통해 자연을 관리하거나 배우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변덕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 대처해나갈 뿐이다(Schwartz & Thompson, 1990; Thompson et al, 1990).

Schwartz & Thompson.(1990)는 앞서 제시된 네 가지 자연관과 문화이론의 문화유형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처음 시도하였고, 강한 설명력을 가진 각 문화유형별 자연관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chwartz & Thompson, 1990; Thompson et al, 1990; Dake, 1991; 김서용, 2004; 강성철 외; 2005).

개인주의의 자연관은 ‘자애로운 자연’의 관점을 가진다. 자연은 은혜로운 존재로서 외부의 개발과 오염에도 견디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자연은 강력한 복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다.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기만 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a hidden hand)’ 의해서 최상의 결과들이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

간중심적(anthropocentric) 관점을 근간으로 하며, 자연 자원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다. 특히 개인주의적 환경관의 관점에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에 찬 해답을 제시한다. 즉, 환경문제나 자원문제에 대해 과학기술과 시장기구를 통해 해결가능하다는 것이다(강성철 외, 2005). 지구의 엔트로피 증가를 과학기술과 시장을 통해 낮출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자연자원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시장과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연자원의 저장고를 조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욕구와 자연자원 저장 공간의 갭(gap)을 충분히 매울 수 있는 것으로 본다(William & Millington, 2004; 강성철 외, 2005에서 재인용).

평등주의의 자연관은 ‘위태로운 자연’의 관점을 가진다. 개인주의 자연관과는 반대로, 자연은 언제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며 손상되기도 쉽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번 손상된 자연은 회복이 불가능하며 자연은 상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작은 흔들림에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 인간과 자연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생물중심적 평등주의를 지향한다. 즉 자연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사슬 이론과 풍요성이론, 부메랑 효과이론을 통해서 설명하듯이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에 의해 상호연결 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로 보고 있다(강성철, 2005). 또한 이러한 환경관은 자연자산과 인간의 욕구간의 함수관계에서도 기존에 지니고 있던 자연자산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에 대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욕구에 대한 방정식을 재수정하지 않으면 미래의 삶이 보장될 수 없다고 본다(William & Millington, 2004; 강성철 외, 2005에서 재인용). 따라서 오염의 원인이 되거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위들은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자연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유형이다.

계층주의의 자연관은 ‘왜곡되어 관대한 자연’의 관점을 가진다. 자연의 본성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속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외부의 충격과 오염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기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일정한 범위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통제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일정 범위의 안전구역을 위해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전

문가의 평가와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권위와 제도에 의한 정부의 관여가 정당화 된다. 전문가와 정부에 의한 계획된 개발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관은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자연관의 중간수준의 시각으로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계층주의 자연관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통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동시에 환경보전에 강한 시각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현실수용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층주의 자연관을 정당화한다(강성철 외, 2005).

마지막으로 운명주의 자연관은 ‘변덕스러운 자연’의 관점과 일치한다. 자연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연환경의 변화는 제비뽑기 하는 것과 같이 아무도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운명주의 자연관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순응하는 피동적 형태를 가지며 자연환경변화의 위험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자신들이 그러한 변화에 어찌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본다. 개인의 삶도 복권과 같은 것으로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환경관련 규제나 정책에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 3 절 문화이론과 위협의 사회구성주의

사회적 맥락과 사회성이 개인의 인지와 스키마를 결정하고, 문화는 스키마처럼 순수하게 체화되지 않은 사고가 아니라 이는 사회적 관행과 연결된 공유된 신념체계이다(Douglas, 1968; Wildavsky, 1987; 김서용, 2004). 이러한 것을 사회구성주의라고 앞서 살펴보았다. 최근 문화적 편향이 위험인식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이러한 인식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지각에 대한 문화이론은 사회적 환경, 선택의 원칙, 지각의 주체를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어떤 형태의 사회라도 자연환경에 대한 고유의 선택적 관점을 산출한다. 그래서 문화적 편향에 따라 어떤 위험은 중시되고 어떤 위험은 경시되는 것이다. 환경적 위해는 문화적 편향에 따라 정의되고 인지되고

관리된다(Douglas & Wildavsky, 1982; Rayner, 1992, 최성욱, 2007 재인용). 즉, 위험의 인식은 선택적이며 그것은 주목의 대상에 따라 변하게 된다(Wildavsky & Dake, 1990).

Wildavsky와 Dake(1990)의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계층주의 문화적 편향을 가진 집단은 정부나 공무원 등과 같은 공식적 권위가 있는 제도와 사람을 신뢰하고 환경과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실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학자를 신뢰하며,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문제해결방식으로는 전문가 위원회나 안전기준 등에 바탕을 둔 것을 선호한다. 즉 위험은 통제가 가능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우려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을 가진 집단에게 있어 위험은 하나의 투자개념이며 부를 가져오는 원천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응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일 수 있다(김서용, 2004). 자신의 선택에 대한 외부강요를 가장 귀찮게 생각하며, 시장과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는 전쟁 등이 가장 큰 위험으로 인식된다. 문제해결방식으로는 정부불간섭의 원칙과 비용편익분석(B/C analysis)과 같은 합리적 의사결정모형을 선호한다.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을 가진 집단에서는 위험이 사람과 자연에게 모두 피해를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위험에도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Schwartz & Thompson, 1990). 계층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정부나 전문가 등이 갖는 권위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정부와 기업 등 지배적 제도는 기득권과 권력에 의해 부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기술적, 환경적 위험이 가장 큰 위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또는 차별 시정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선호한다. 운명주의 문화적 편향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 문화이론가들은 신뢰나 관심문제, 해결방식 측면에서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다만 운명주의 문화유형은 어떤 사건의 발생과 결과를 운이나 숙명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결정은 자신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Wildavsky & Dake, 1990; 최성욱, 2007).

노진철(2010)은 위험의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문화이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하여 문화적 편향이 위험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네 가지 결론을 통해 보

여주었다. 첫째, 네 가지 문화적 편향의 집단은 국토, 물, 해양 등 ‘자원’의 점유에 대한 판단기준도 집단별로 다르다. 둘째, ‘지식’의 포섭 범위에 대해서도 문화적 편향을 달리하는 집단 별로 다른 관찰이 행해진다. 셋째, ‘학습’에 대해서도 문화적 편향을 달리하는 집단마다 다르게 관찰한다. 넷째, ‘합의’에 이르는 계기는 네 가지 문화적 편향의 집단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들과 관점을 살펴보았을 때, 기후변화인식에 대한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이론에서 사용하는 문화적 편향의 측정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제 4 절 Q 방법론

1. Q 방법론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 연구를 위해 심리학은 물론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접근방법이며, 연구방법인 동시에 분석방법이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에 걸쳐 어떤 속성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춘 행태주의 연구방법과는 전혀 반대로 주관적 속성들에 걸쳐 사람들 사이의 상관관계¹⁹⁾를 찾아내는 방법이다(김홍규, 2008 : 1). Q방법론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는 William Stephenson에 의해 1935년 시작되었으며, 1935년 발표한 “Technique of factor analysis”라는 논문에서 인간의 퍼스넬리티 연구는 종래의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김홍규, 2008 ; 3). 즉 과학에 있어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주관성과 객관성 사이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Q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Q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적 속성들에 초점을 두는 연구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접근방법이다. 이것은 Q방법론이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대신 응답자 스스로 그들의 의견과 의미를 만들어가는 자결적 정의(operant definition)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즉 연구자의 가정이 아니라 행위자의 관점에서부터

19) 응답자간의 유의성과 상의성이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Q방법론은 시작된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되는 진술문은 모두 응답자의 자아참조적(self-referent) 의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홍규, 2008 : 10).²⁰⁾ 그리고 주어진 진술문을 행위자 스스로의 조작(Q-sorting)을 통해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고, 그것을 객관적인 구조물(operant framework)안에 투영시키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주관성을 드러내게 된다.²¹⁾ Q방법론의 연구 단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하겠다.

Q방법론은 사회심리학분야뿐만 아니라 정치학, 언론학 연구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화 호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관한 인식을 Q방법론을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재구성한 Dryzek(1993, 1994)의 연구는 정치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일반에서도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온 것이라 평가된다(박순열, 2010). 또한 Addams와 Proops(2000)는 그들의 저서인 *Social Discourse and Environment Policy: An Application of Q Methodology*를 통해서 Q방법론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기후변화, 대형개발프로젝트 등)들을 다루는 환경정책과 사회담론 분석에도 큰 역할을 하고, 유용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Thomas Webler et al.(2009)의 연구 역시 Q방법론이 가지는 사회인식 분석방식이 환경과 관련한 연구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가설생성의 논리

Q방법론은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이에 대해 김홍규(2008)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존의 소위 주류의 과학적 연구들은 가설 연역적 사고체계(hypothetico-deductive)를 바탕에 두고 이루어졌다. 가설연역주의란 연구자가 내적논리와 일관성이라는 표준에 부합되는 가설 혹은 이론을 먼저 만들고 이것을 귀납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때 가설은

20)한 진술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이나 상황을 투영해 봄으로써 긍정 또는 부정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진술문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다를 자아지시적 생각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환경인식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 가를 드러낸다는 것이다(박순열, 2010).

21) 양적 방법에서는 각 사람들의 반응이 변인에 따라 정상분포로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각 변인별로 정해진 정상분포 내에서 상대적 위치에 근거하여 개인차를 설명하지만 Q방법론은 한 개인 내에서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다양한 의미를 찾으려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인간 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을 취한다(Gerde, 2001; 박경수, 2006에서 재인용)

이론으로부터 연역되는데, 그 단서는 주로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논문, 이론서, 관련 산업현장 등에서 직관적이거나 혹은 ‘우연히’만들어지는 경우가 일상적이다. 이러한 가설을 임의적 가설(ad hoc hypothesis)이라 한다. 그러나 Q방법론은 주어진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로 ‘가설을 만드는’, ‘가설을 발견해 가는’ 가설추론적 방법론이다. 즉 임의가설과는 대조되는 참가설(genuine hypothesis)을 만드는 것이다. Stephenson은 Q방법론을 통해 참가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가정이 바로 가설추론의 논리이다. 과학적 단계에 있어 가설추론은 명제로부터 가설을 연역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가설연역적 방법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일단 참가설이 만들어진 후에야 그 가설의 논리 전개가 가능하며 현실 검증을 위한 가설연역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Q방법론에서 가설을 찾아내는 과정은 가설 연역적 방법에서 연구 가설을 만드는 과정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쟁점이 어떻게 각 개인에게 구조화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Q방법론이 오히려 가설연역적 방법론에 대한 연구의 길잡이가 된다(김홍규, 2009 : 11 ~ 21). 이 연구는 국내에서 기후변화인식의 유형을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Q방법론의 가설추론의 논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Q 방법론의 과정

Q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요시 여섯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Q방법론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김헌수·원유미, 2000; 김순은, 2007; 김홍규, 2008; 박순열, 2010; 강준모, 2012).

1) Q 모집단(Q population)의 구축

Q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연구의 주제가 되는 것과 관련한 모든 것을 확보하여 Q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인 Q모집단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자극항목, 물체 등으로써 진술문, 사진, 그림 광고물 등 다양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진술문의 형태로 카드위에 인쇄되는 방식을 사용한다. Q모집단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Q모집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다. 이를 통해 수집되는 Q진술문의 범위와 주제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진술문의 수집방법은 기성적 표집방법(ready made sampling)과 자연적 표집 방법(naturalistic sampling)으로 나뉘어진다. 기성적 표집 방법은 기존에 존재하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진술문을 추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논문, 책,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진술문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 자연적 표집 방법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 진술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을 더 잘 대변할 수 있고 연구절차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면담을 통한 진술문 추출 방법이 대표적이다.

2) Q 표본(Q Sample)의 선택

Q표본은 Q모집단에서 표집된 항목을 의미하는데 Q표본을 표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비구조화(unstructured) 표집과 구조화(structured) 표집방법이 있다. 비구조화 표집 방법은 다시 무작위 표집과 주제별 체계적 표집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무작위 표집은 모집단에서 표본의 수를 정하고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연구자의 선정의 편견을 최소화해주고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모집단의 본질에 관한 정보를 무시하여 표본이 특정 분야에 편중될 수 있다. 주제별 체계적 표집 방법은 Q모집단 구축하면서 비슷한 진술문들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진술문들을 여러 개의 일반적인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 집단에 맞는 주제를 설정, 각 집단 안에서 Q표본을 표집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무작위 표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의 편중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구조적 표집은 이론에서부터 출발한다. 구조적 방법의 Q진술문은 피서식 실험 및 분산설계의 원리를 따른 것으로 이론적 관점을 사용하여 진술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즉, 주제에 대해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모집단에서 진술문의 표본을 선택하는 것이다. 구조화 표집의 장점은 측정의 측면에서 통제를 할 수 있고, 보다 이론과 가설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강준모, 2012). 이후 타당도 검사(validity test), 사전검사(pretest), 신뢰도 검사(reliability test)를

통해 최종적으로 Q표본을 완성하게 된다.

Q표본의 수는 각 연구의 독특한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40개에서 60개 정도가 보편적이다. Q표본의 수가 많아질수록 표본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김홍규, 2008).

3) P 표본(P Sample)의 선정

Q방법론에서 연구의 조사 대상자를 P표본이라 하는데 R방법론에서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표본으로 선정되지만 상대적으로 검사물의 수는 적다고 할 수 있다. Q방법론에서는 정반대로 적을 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 Q방법론에서는 사람이 변인이고 항목을 표본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P표본의 수는 요인(factor)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Q방법론에서 P표본의 선택방법은 심층적 연구(intensive study)와 포괄적 연구(extensive study)로 구분할 수 있다. 심층적 연구는 극히 소수의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연구에 적합한 1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반면, 포괄적 연구에서는 P표본의 수를 30명에서 50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김서용, 2004). Q방법론에서 피험자의 선정은 R방법에 비해 제약적이지는 않지만 연구주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순은, 1999).

4) Q 표본의 분류(Q-sorting)

기본적으로 Q표본의 분류는 순위 정하기 절차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한 개인이 어떤 이슈나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의 모형을 Q진술문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이다. Q연구의 목적은 특정한 개인의 인식, 견해, 가치관, 태도 등과 같은 자기 준거 시각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하여금 ‘자기준거(self-referent)’에 따라 Q표본의 일정한 모형을 만드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Q표본의 분류의 결과를 Q sort라고 하는데, 이는 한 개인의 주관성을 나타내는 모형이다. 일반적으로 인쇄된 진술문 카드를 피험자가 직접 본인의 관점에 따라 분류판에 분류하게 된다(김순은, 2007; 김현수·원유미, 2000; 김홍규, 2008; 강준모, 2012에서 재인용). Q표본의 분류에는 연구자가 등각척도의 등급과

응답개수를 정해두고 피험자에게 분류를 하게 하는 강제분류방법(forced sorting)과 지정된 등간척도 범위 내에서 응답자가 자유롭게 진술문의 등급을 정하는 비강제분류방법이 있다.

Q표본 분류 시 제시하는 분포 모양의 결정은 연구 주제와 Q표본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연구의 주제가 비교적 단순하거나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면 ‘정상성(normality)’에 가까운 분포의 모양(정규분포)이 적합하다. 그러나 매우 논쟁적인 주제의 경우 피험자들은 각 진술문들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각각에 대해 의견이 분명해서 찬반이 뚜렷해지고 따라서 중립 부분이 적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분포의 모양이 다소 납작하게, 양 끝은 다소 두툼하게 만들어 분포의 양극단의 의견(매우 찬성/매우 반대)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면 된다(김홍규, 2008).

5) 자료 처리 및 분석

Q방법론의 통계적 과정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유형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수학적으로 R방법의 요인분석과 같다. 요인분석은 여러 개의 변수들을 보다 적은 수의 가설적 변수인 요인으로 바꾸는 통계기법으로 검사물이나 특성 등이 변수가 되지만 Q방법에서는 사람이 변수가 된다. 따라서 Q방법에서 요인분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을 분류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주제에 대해 두 사람이 비슷하게 분류했다면 그들은 동일한 요인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피험자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그들의 언어를 통해 요인을 드러나게 해준 것이다(김홍규, 2008).

Q방법론의 통계 패키지에는 설명변량의 극대화를 제공하는 QUANL 프로그램과 연구자가 특정이론이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축을 회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 회전방법인 PQMethod 프로그램 등이 있다.

연구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요인 분석 결과를 가지고 각 요인들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요인 특성에 맞게 요인별로 명명하게 된다.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다소 해석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여섯 번째 단계인 사후 면담(post-interview) 단계를 거치게

된다. 피험자들과 다시 면담 등을 통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Q표본을 분류하였으며,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응답내용을 Q조사 해석에 사용하는 단계이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기후변화 인식 유형의 측정: Q방법론

Q방법론의 연구단계에 맞추어 이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설계를 하였다. 첫 번째로 Q모집단의 구축을 위해 Q모집단을 ‘기후변화의 원인, 영향, 해결방안, 대응정책, 개인과의 상관성에 관한 모든 자아참조적(self-referent)진술문’으로 정의하였다. 진술문의 수집방법은 ‘기성적 표집 방법’과 ‘자연적 표집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1차 진술문 수집은 사설, 논문, 논평, 성명서, 기사 등을 통해 약 140여개의 진술문을 수집하였고, 2차 진술문 수집은 면담²²⁾, SNS²³⁾ 등을 통해 약 30여개의 진술문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기후변화인식에 대한 총 172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된 Q모집단을 구성하였다.

Q표본(Q sample)의 표집은 주제별 체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2>와 같이 주제를 정하고 172개의 진술문을 주제에 맞추어 분류한 다음, 중복되는 내용의 진술문은 삭제하고, 합칠 수 있는 진술문들은 합쳐 다시 작성하였다. 또한 진술문에 대한 이중적 해석이나 전문용어의 사용 등으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쉬운 단어들을 이용한 단문 위주의 진술문으로 일부의 진술문은 수정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총 46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Q표본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고,²⁴⁾ 이를 통해서 얻는 신뢰도 r 값은 88.4로 Q표본의 신뢰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P표본을 선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위험에 대한 사회구성적 접근방식이다. 접근방식은 두 가지로 세분화 될 수 있는데, 첫째, 거시적·집합적 수준의 접근으로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요소나 사회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집단적 인식문화의 차이에 주목한다.

22) 환경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 3명(남 2, 여 1)과 약 30분 정도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23) 연구자의 Facebook 계정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학원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을 한 두 문장으로 표현한 것을 수집하였다.

24) 대학원생 5명을 대상으로 4월 11일 1차, 4월 14일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2〉 진술문의 주제별 분류

진술문 분류	진술문 하위분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의 실재여부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 태도
	기후변화와 과학
기후변화와 개인	기후변화의 개인적 영향과 대응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와 현재
	기후변화와 미래
기후변화의 해결방안	기후변화 대응과 과학 및 기술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기후변화 대응과 정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방식
	기후변화 해결의 책임(기후정의)
	정보의 공유 및 교육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시급성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평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방향
기타	기타

둘째, 미시적·개별적 접근방법은 행위자들 또는 행위자간의 인지적 이해와 해석에 초점을 맞추다. 이 접근 방법에서는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인지적·가치적 측면에 주목하게 된다. 이 연구는 미시적·개별적 접근방법을 선택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가치적 측면들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인식을 분석하는 심층적 연구(intensive study)라기보다는 대중에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포괄적 연구(extensive study)이다. 그러므로 Q방법론 연구의 조사 대

상자가 되는 P표본의 수는 30명에서 50명 사이가 적당하여, 이 연구에서는 45명을 대상으로 Q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목적인 대중의 기후변화 인식 유형을 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비슷한 목적을 가진 선행연구들에서 P표본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Johanna Wolf et. al(2009)는 기후변화, 환경, 지역의 이슈에 대한 주요 행위자(key actors)와 일반대중의 스펙트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 P표본을 선정하였다. 박순열(2010)은 한국 생태시민의 인식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운동가, 환경관련 공무원, 대학교수를 포함한 전문연구자, 개발을 대표하는 민간기업과 정부투자기관 연구원, 종교단체 활동가, 노동운동활동가, 전업주부, 일반 사무직 직장인, 파트타임 노동자 등으로 가능한 한 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다양한 입장을 갖는 사람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정태철(2010)은 한국 언론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유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톰슨(Thompson)의 스키마타(schemata)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톰슨의 스키마타에 따르면, 사람들의 최대한 상이한 태도 유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1)전문가(expert), 2)관계 당국자(existing authorities), 3)특수 이익 관계자(special interest), 4)계급 이익 관련자(class interest), 5)일반인(the uninformed) 등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무작위로 조사 대상자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각 항목별 집단을 선정하여 정치적 성향, 나이, 성별, 지역 등을 추가로 고려, 총 55명을 선정하였다. 진상현(2012)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유형 분석을 위해서 직업, 성별, 지역, 학력 등에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5명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3명, 충청권 14명, 경상권 15명, 전라권 3명, 강원·제주 5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2명, 고졸 18명, 대졸 27명, 대학원 이상이 3명이었으며, 직업별로도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게 표본을 수집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방법을 참고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최대한 상이한 인식을 나타내 줄 수 있는 P표본을 선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P표본은 일

반적 인구 구성이나 사회적 특성 분포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으며, 다만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특정 성향의 사람들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인을 ‘일반인’, ‘사회운동가’, ‘공무원’, ‘전문가’의 네 개의 사회집단으로 분류하고 이 사회집단을 다시 환경관련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차 분류의 네 개의 사회집단은 기후변화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네 사회집단은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생활 방식, 정보의 양 또는 출처가 명확히 다른 집단이다. 또한 문화이론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이 네 집단은 집단(Group)과 망(Grid)의 영향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분명히 다르게 받고 있다. 문화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의 구성 역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사회적 집단 분류가 기후변화인식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네 개의 사회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하더라도 기후변화인식의 유형이 사회집단에 따라 네 가지로 유형화된다는 것을 연구 가설로 정한 것이 아니다. P표본의 분류는 단순히 기후변화인식 대한 가능한 한 다양한 입장을 포함하기 위함이다.

2차 분류에서는 1차 분류를 통해 나온 네 개의 사회집단을 집단 내 개인이나 하위 집단의 환경관련성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세분화 하여 더 다양한 입장과 의견들을 포함하였다. 같은 사회집단 내에 있더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환경관련 전문가와 기술이나 공학관련 전문가가 생각하는 기후변화의 해결 방안이나 효과적인 대응 정책의 방향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P표본을 분류한 것과 각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자는 <표 3>과 같으며 실제 응답자 구성 <표 4>와 같다.

〈표 3〉 P 표본(P-sample)의 분류

구분	환경관련성 높음	환경관련성 낮음
일반인	농·어민, 환경컨설팅, 환경관련 전공 학생 등	사무직, 타전공 학생, 주부 등
사회운동가	환경운동가, 에너지운동가 등	타분야 운동가
공무원	환경부, 지자체 환경정책과 공무원 등	산자부, 국토부, 교육공무원 등
전문가	환경 분야 전문가	타 분야 전문가

〈표 4〉 P 표본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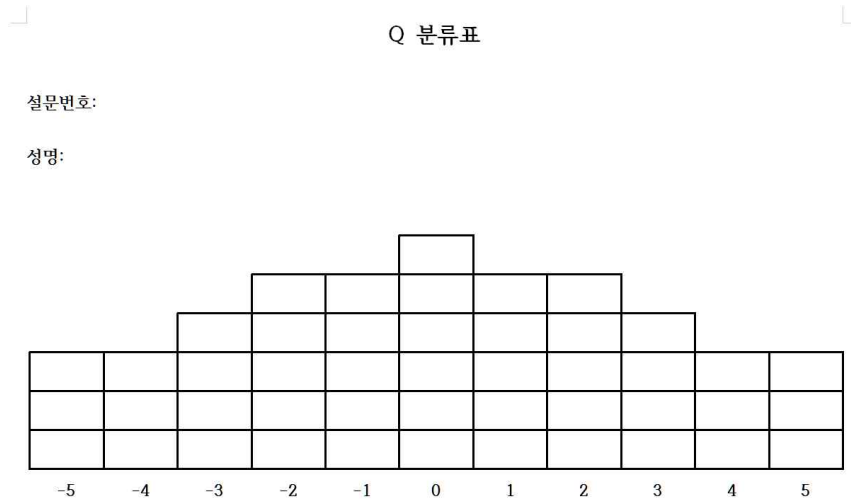
ID	성별	나이	성명	직업	환경 관련성	학력
s1	남	48	임OO	농업	상	대졸
s2	여	32	김OO	농업	상	대졸
s3	남	48	최OO	농업	상	대졸
s4	남	58	김OO	농업	상	고졸
s5	여	36	이OO	** 연구소 연구원	상	석사
s6	남	38	이OO	환경컨설팅	상	석사
s7	남	30	이OO	환경컨설팅	상	대졸
s8	여	27	이OO	대학원생	하	대졸
s9	여	33	홍OO	주부	상	석사
s10	여	27	방OO	회사원	하	대졸
s11	남	30	이OO	회사원	하	대졸
s12	여	35	성OO	에너지 운동가	상	대졸
s13	여	38	이OO	에너지 운동가	상	대졸
s14	여	29	최OO	노동 운동가	하	석사
s15	남	31	김OO	협동 운동가	하	석사
s16	여	28	황OO	인권 운동가	하	대졸
s17	남	30	김OO	인권 운동가	하	대졸
s18	여	31	백OO	인권 운동가	하	석사
s19	여	27	서OO	환경부 공무원	상	대졸
s20	남	38	박OO	서울시 공무원	상	대졸
s21	남	54	임OO	서울시 공무원	상	대졸
s22	남	37	백OO	서울시 공무원	상	대졸
s23	여	25	이OO	교육 공무원	하	대졸

s24	남	29	임OO	교육 공무원	하	대졸
s25	남	52	구OO	** 연구소 소장	상	박사
s26	남	50	안OO	** 연구소 소장	상	박사
s27	남	39	박OO	** 연구원	상	박사
s28	남	59	김OO	행정학 교수	하	박사
s29	남	29	한OO	** 연구소 연구원	하	박사
s30	남	29	이OO	소방 공무원	하	대졸
s31	남	29	양OO	대학원생	하	석사
s32	남	40	이OO	**연구원 연구원	하	박사
s33	남	30	김OO	**연구원 연구원	하	석사
s34	여	24	이OO	회사원	하	대졸
s35	남	50	김OO	환경공학 교수	상	박사
s36	남	52	박OO	지반환경공학 교수	하	박사
s37	남	48	김OO	**연구원 선임연구원	하	박사
s38	여	49	고OO	**연구원 선임연구원	하	박사
s39	남	50	이OO	**연구원 선임연구원	하	박사
s40	남	59	이OO	**세무소 소장	하	박사
s41	남	44	이OO	**연구소 소장	상	박사
s42	여	31	신OO	환경 운동가	상	석사
s43	여	30	정OO	환경 운동가	상	대졸
s44	남	26	박OO	대학원생	상	대졸
s45	남	29	이OO	대학원생	상	대졸

Q표본의 분류(Q-sorting)방법은 강제분류방법(forced sorting)을 선택하였다. 이번 연구의 주제가 단순하거나 별로 흥미가 없는 것이 아닌 응답자간의 논쟁적인 주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견에 대한 찬반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Q분류표의 모양은 다소 납작하며 양 끝이 다소 두툽한 모양을 선택하였다. Q진술문이 46개이기 때문에 -5부터 +5까지의 범위를 제시하였다.²⁵⁾ 이

25) Q진술문의 항목수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범위(너비)도 넓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본수가 40개 이하인 경우 -4에서 +4(9점 척도) 범위가 안전할 것이며, 표본수가 40개가 넘는다면 -5에서 +5(11점 척도), 만일 50개를 넘는다면 -6에서 +6(13점 척도)를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표본의 수가 60개를 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개의 경우 40 ~ 50개 정도라면 양쪽 끝이 조금 두툽하고 정성분포보다는 다소 평퍼짐한 분포를 사용한다(김서용, 2004 : 124).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Q 분류표 (진술문 46개)

제 2 절 문화적 편향의 측정

문화적 편향의 측정은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인 안정가설(stability hypothesis)과 변동가설(mobility hypothesis)을 기반으로 한다(Tansey & O'Riordan, 1999). 변동가설에서 개인의 문화적 편향은 맥락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맥락이 연구의 관심이다. 안정가설에서 개인은 맥락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문화적 편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문화적 일관성을 가진 개인들이 연구대상이 된다(Dake & Wildavsky, 1992; Dake, 1992; Marris et al., 1998; 김서용, 2004²⁶⁾). 측정문제와 관련해 안정가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편향을 측정할 수 있는 심리측정 문항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변

26) 현재까지 문화이론의 측정은 주로 문화편향을 각 개인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의존해왔으며 (Dake, 1990, 1991, 1992; Gastil, 1995; Marris et al., 1998; Grendstad, 1999, 2001, 2001; Grendstad & Sundback, 2003; Rippl, 2003; 박종민·왕재선, 2004), 집단과 망에 기반한 연구는 극히 일부이다 (Gross & Rayner, 1995; Hampton, 1982)(김서용, 2004에서 재인용).

동가설은 맥락, 즉 집단과 망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민속지적 방법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서용, 2004).

이 연구에서는 안정가설 바탕으로 네 가지 문화유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es)’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김서용(2004)의 주장과 같이 문화는 ‘개인’과 ‘맥락’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기 때문에, 두 변수간 다양한 조합 즉, ‘맥락’이 ‘개인’에게 부과하는 강제와 의미의 정도, ‘개인’의 성격적 특징이 ‘맥락’을 수용하는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설문문항들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국내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Dake(1990, 1991)가 처음으로 문화이론을 반영하여, 문화편향 측정문항을 개발한 이후에 많은 연구들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형, 발전 등을 통해 2000년 중반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나경 외(2008), 김서용(2004, 2005), 박종민 외(2005), Brenot et al.(1998), Dake(1990, 1991, 1992), Marris et al.(1998), Rippl(2002)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계층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에 대해 각각 3문항을 선정하였다.(부록참조)

5점 척도 방식으로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매우 그렇다(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응답자들을 문화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들처럼 문화적 편향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대신 각 문화적 편향에 대한 응답자의 성향정도·수용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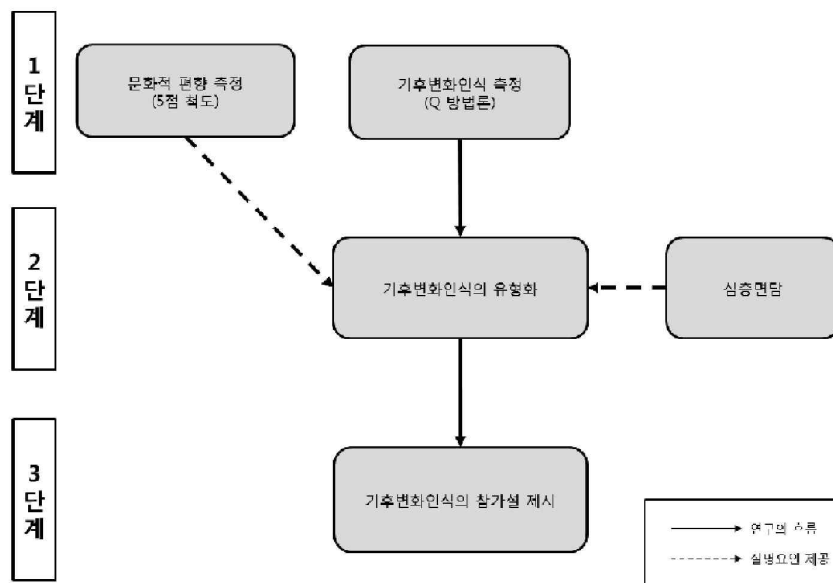
제 3 절 인식유형별 설명과 특성분석

제1절과 제2절의 분석과 문화적 편향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인식 유형들을 인식 유형 내 구성원들의 문화적 편향을 기초로 설명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Q방법론은 가설생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참가설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 역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유형을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식유형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기후변화 인식 유형에 대한 참가설들을 만드는 데 분석의 중심을 두었다.

Q분류와 PQMethod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 후 각 기후변화 인식유형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기후변화 인식유형과 문화적 편향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관계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후 면접(post-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사후 면접의 대상자는 각 인식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1 ~ 2명 정도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설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 구 모 형

제 4 장 분석결과와 논의

진술문(Q표본)과 응답자(P표본)가 선정된 이후 실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를 위해 2013년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총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식은 진술문 간의 반복적인 상호 비교를 통해 신중한 판단과 분류가 가능하도록 진술문 카드를 이용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설문지의 지시사항에 따라 응답자들은 진술문 카드를 읽고 정규분포 형태로 만들어진 Q분류표에 강제배분 하도록 하였다.

Q방법론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요인분석과 동일한 분석기법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회전에는 요인 숫자에 초점을 맞춘 변량 극대화(Varimax) 회전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PQMethod 2.35를 사용하였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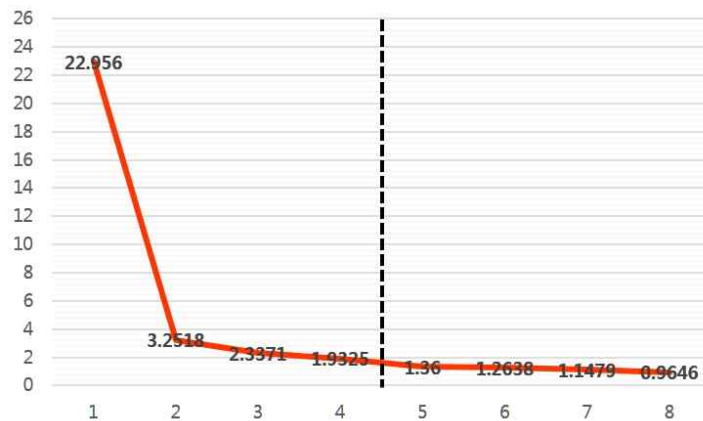
제 1 절 인식유형의 추출

인식유형의 개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유값(Eigen value) 1이라는 ‘카이저(kaiser)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진상현, 2012).²⁸⁾ 하지만 이 연구의 분석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7개였기 때문에 <그림 4>와 같이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이용해서 기울기가 가장 완하게 변하는 네 번째 요인을 기준으로 4개의 인식유형을 선정하였다.²⁹⁾

27) PQMethod는 국내외 선행연구들 대부분에서 사용될 정도로 보편적인 Q분석 프로그램으로, 이 연구에서는 Q방법론 홈페이지(<http://qmethod.org>)를 통해 다운받아서 사용하였다.

28) 요인분석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기본으로 잠재적인 인자들을 도출하는 분석기법이기 때문에 상관계수행렬의 대각원소인 1 보다 큰 고유값을 가질 경우 원래의 변수보다는 큰 정보를 갖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카이저 규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에 줄리페(Jolliffe)의 경우에는 카이저의 규칙인 1 대신에 0.7을 제안한 바 있다. 결국 어떤 기준을 채택할 지는 연구자의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진상현, 2012).

29) 스크리 도표는 수평축에 요인 번호를 놓고 수직축에 요인별 고유값을 연결한 그림을 가리킨다. 이



〈그림 4〉 요인별 고유값의 스크리 도표

각 유형의 설명력은 <표 5>와 같이 유형 A는 37%, 유형 B는 7%, 유형 C는 21%, 유형 D는 9%로 나타나 총 누적 설명력은 68%이다. 박경수(200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누적설명력이 40%이상이면 의미가 있고, 50%이상이면 비교적 높은 설명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결과는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할 해야 할 것은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유형의 설명력이 한국 사회전체에 해당 수치만큼의 설명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의 P표본인 응답자들에 대해서 그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 다는 것이다. Q방법론은 그 모집단이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태도의 총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견된 유형을 토대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직접적인 관계나,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대표성의 정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람을 찾아내서 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유형을 포착하는데 도움이 된다(박순열, 2010). 각 인식유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수는 유형 A는 20명, 유형 B는 3명, 유형 C는 10명, 유형 D는 5명이며, 어떠한 인식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응답자가 7명이었다. Q방법론에서는 인식유형에 단 1명의 응답자가 있더라도 이를 유의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 스크리 도표는 특정구간에서 꺾은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떨어진 후 완만한 감소를 보인다면 하강하는 지점에서 요인의 개수를 결정하는데 활용되는 기준이다.

각 인식유형에 속한 응답자의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표 5〉 인식유형의 요인적재치와 설명력

구분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요인적재치	22.9506	3.2518	2.3371	1.9325
설명력(%)	31	7	21	9
누적설명력(%)	31	38	59	68
P표본 수	20	3	10	5

각각의 인식유형은 기후변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틀에 따라 비슷한 의견, 생각, 태도 등을 가진 사람들로 분류한 것으로 각 인식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요인 적재치는 <표 6>과 같다. 어떤 인식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7명의 응답자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인식유형에 높은 적재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P 표본의 각 유형별 요인 적재치

P 표본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응답자 1	0.6613	0.1216	0.2498	0.2821
응답자 2	0.8331	0.0631	0.2746	0.2019
응답자 3	0.8060	0.0143	0.3381	0.1690
응답자 4	0.6391	-0.0542	0.4216	0.3623
응답자 5	0.6308	0.1440	0.5529	0.0211
응답자 6	-0.0903	0.8029	0.0885	0.0277
응답자 7	0.2071	0.2971	0.5787	0.2816
응답자 8	0.4873	-0.0395	0.6791	-0.0527
응답자 9	0.6555	-0.0153	0.6430	-0.0600
응답자 10	0.6695	0.2625	0.2211	0.2539
응답자 11	0.6079	0.1814	0.5723	0.1851
응답자 12	0.5734	0.2954	0.2617	0.3593
응답자 13	0.6990	0.3010	0.2286	0.2753
응답자 14	0.8261	0.3325	0.1721	0.1833
응답자 15	0.6578	0.2603	0.4072	0.2091

응답자 16	0.8553	-0.0507	0.1665	0.1738
응답자 17	0.7633	0.2698	0.2154	0.2049
응답자 18	0.7797	0.0599	0.4248	0.1528
응답자 19	0.5089	0.1582	0.5918	0.2730
응답자 20	0.4370	0.5789	0.3584	-0.0079
응답자 21	0.1562	0.1717	0.2699	0.6387
응답자 22	0.0881	0.3367	0.6240	0.1779
응답자 23	0.5533	0.0543	0.5359	0.2679
응답자 24	0.3248	-0.1881	-0.0644	0.6858
응답자 25	0.7963	-0.1299	0.4214	0.1711
응답자 26	0.6876	-0.0776	0.4478	0.2391
응답자 27	0.3346	-0.0211	0.7985	0.3426
응답자 28	0.3456	-0.2230	0.5556	-0.0989
응답자 29	0.3557	0.2090	0.1923	0.6364
응답자 30	0.4879	0.2886	0.3521	0.1054
응답자 31	0.3361	0.2692	0.4449	0.1036
응답자 32	0.4526	-0.0052	0.5099	0.3969
응답자 33	0.7408	0.0908	0.2314	0.0753
응답자 34	0.2971	0.6071	-0.1599	0.2853
응답자 35	0.0464	0.1857	0.6630	0.3591
응답자 36	-0.5014	0.2782	0.2188	0.6256
응답자 37	0.2096	0.2810	0.3018	0.6207
응답자 38	0.4400	0.1550	0.6915	0.2591
응답자 39	0.3025	0.5172	0.4117	0.3574
응답자 40	0.4877	-0.2118	0.5226	0.3857
응답자 41	0.3868	-0.0635	0.6277	0.2256
응답자 42	0.4493	0.1826	0.5320	0.2918
응답자 43	0.6597	0.2114	0.4695	-0.1511
응답자 44	0.7194	0.1259	0.4251	0.0655
응답자 45	0.3118	0.2863	0.7620	0.0659
계	20	3	10	5

<표 7>은 개별 진술문에 대한 Z-score를 인식유형별로 -5점에서 5점까지로

전환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표 7〉 개별 진술문에 대한 인식유형별 점수

진술문	유형			
	A	B	C	D
1. 기후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4	0	-3	-4
2.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1	-1	0	2
3. 기후변화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1	1	3	4
4. 기후변화는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알려지고 있다.	-3	3	-4	0
5. 현재의 기후변화정도(지구평균온도가 0.74℃ 상승)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2	-3	-1
6. 지구는 훼손에 대한 강력한 복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4	-2	-5	-3
7.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증거는 믿을만하지 않다.	-2	0	-5	-1
8. 과도한 소비로 인해 기후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2	-3	1	-1
9.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활동 때문이다	4	1	3	-2
10. 기후변화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다.	1	-3	1	-5
11. 지금은 “기후변화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이다.	5	5	5	3
12. 기후변화가 심각한 것은 알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1	0	-4	-3
13. 나의 작은 행동변화가 기후변화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0	1	2	-3
14.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정책을 따르겠다.	1	-1	3	2
15. 나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다.	-3	-2	-4	-1
16. 기후변화는 개인보다 기업이나 사업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2	-2	-1	4
17. 내가 평소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1	3	-5	2
18. 최근에 발생한 이상 기후현상(이상고온, 태풍, 홍수, 폭설 등)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2	3	4	1
19. 기후변화는 새로운 사회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3	-1	0	2
20. 기후변화의 영향은 일부지역, 일부사람들에게만 심각한 문제이다.	-5	-3	-3	-5
21. 지금보다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이상기후가 더 빈번히 일어나더라도 인류는 그 상황에 적응하며 잘 살아 갈 것이다.	-3	-2	-2	0
22. 온실가스를 과감하게 감축할수록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2	-5	-2	-2
23. 경제가 발전하면 기후변화는 해결될 수 있다.	-5	-5	-2	1
24.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4	5	-1	1
25. 기술적 발전으로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1	1	2
26. 기후변화가 초래한 위기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1	-4	-1	-3
27. 민주주의는 기후변화 대처에 필수적이다.	2	-1	0	0
28.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성 증대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다.	0	0	5	4

29.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4	1	4	1
30.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	-5	-5	-3	-5
31. 기후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활방식이 바뀌어야 해결된다.	5	0	4	0
32. 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선진국들이 큰 책임을 가지고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5	3	2	5
33. 부유할수록 기후변화 대응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	3	-3	1	5
3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	1	3	3
35.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어야 한다.	3	2	5	5
36. 기후변화 보다 더 긴급한 국제적 문제들이 있다.	-1	4	2	3
37.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별 관심을 끌지 못한다.	0	4	2	1
38.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에 너무 소극적이다.	3	4	0	0
39.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다.	-3	2	-2	-4
40. 정부정책을 통한 엄격한 규제만이 기후변화로 인한 파멸을 막을 수 있다.	0	-4	-1	-1
41. 전문가의 분석을 통한 결정보다는 일반국민들의 의견들이 포함된 기후변화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0	0	0	0
42. 기후변화는 국제, 국가적 수준의 대응보다 지역, 공동체적 대응이 더 효과적이다.	0	5	1	-4
43. 기후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보다는 기후변화 적응정책부터 강구해야 한다.	-2	2	-2	-2
44. 기후변화 대응은 정부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이 되어야한다.	1	-4	-1	-2
45. 적은 비용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1	2	2	3
46. 기후변화에 대한 과감한 정책을 펼치기에는 국민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2	2	0	-2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각 인식유형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인식유형에 대한 명명화(naming)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진상현(2011)에 의하면 개별 인식유형의 특징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반대한 진술문의 분포를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이다. 둘째, 다른 요인들과 통계적으로 구별되는 진술문을 해석함으로써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셋째, 각각의 요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성향을 통해서 요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앞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개별 인식유형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고, 해당응답자의 성향을 나타낸 문화적 편향을 이용하여 각 인식유형의 특성이 왜 그렇게 나타는지 설명해 주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네 가지 인식유형은 ‘전사회대상 생활양식전환 추구형’, ‘소집단주도 현실개혁 추구형’, ‘개인중심 에너지 전환 추구형’, ‘원인자중심 시장기반 대응 추구형’으로 분석되었다.

제 2 절 인식유형의 특성

1. 합의적 진술문과 논쟁적 진술문

각 인식유형의 특성을 분석하기 전에 인식유형들간 합의적 진술문과 논쟁적 진술문을 분석하였다. 인식유형들간의 합의적 진술문과 논쟁적 진술문의 분석은 비록 이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나 태도 또는 상이한 생각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합의적 진술문과 논쟁적 진술문은 <표 8>과 같이 제시되었다.

<표 8> 합의적 진술문 & 논쟁적 진술문

진술문	유형			
합의적 진술문	A	B	C	D
11. 지금은 “기후변화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이다.	5	5	5	3
41. 전문가의 분석을 통한 결정보다는 일반국민들의 의견들이 포함된 기후변화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0	0	0	0
20. 기후변화의 영향은 일부지역, 일부사람들에게만 심각한 문제이다.	-5	-3	-3	-5
30.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	-5	-5	-3	-5
논쟁적 진술문	A	B	C	D
4. 기후변화는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알려지고 있다.	-3	3	-4	0
42. 기후변화는 국제, 국가적 수준의 대응보다 지역, 공동체적 대응이 더 효과적이다.	0	5	1	-4
17. 내가 평소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1	3	-5	2

모든 인식 유형에서 11번 진술문(지금은 “기후변화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이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41번 진술문(전문가의

분석을 통한 결정보다는 일반국민들의 의견들이 포함된 기후변화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에 대해서는 모든 인식유형에서 0점으로 완벽히 중립적인 평가를 하였다. 20번 진술문(기후변화의 영향은 일부지역, 일부사람들에게만 심각한 문제이다.)에 대해서는 모든 인식유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30번 진술문(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모든 인식유형이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4번 진술문(기후변화는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알려지고 있다.), 42번 진술문(기후변화는 국제, 국가적 수준의 대응보다 지역, 공동체적 대응이 더 효과적이다.), 17번 진술문(내가 평소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인식유형별로 상이한 시각을 보여주었으며 그 차이도 긍정, 중립, 부정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모든 인식유형은 기후변화 실체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제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기후변화는 광범위한 지역,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반대로 인식유형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장의 여부, 대응범위와 방식, 평소 생활에서의 고려 등에서는 매우 상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래의 분석에서는 합의적 진술문의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여 각 인식유형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인식유형별 특성

Q방법론에서 각 유형을 분석해내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Q방법론은 일반적인 요인 분석과 다르게 일군의 변인에 관한 검사를 여러 사람에게 실시하고 얻은 점수를 통해 사람 간에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즉, N 사람에게 검사하고 얻은 점수를 N 사람간에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상호상관계수 행렬을 요인 분석한다. 이렇게 추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요인을 정렬하고 해석하여 주관성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Q요인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응답자 집합을 나타내며 이는 한 주제에 대하여 사람들간의 유사한 관점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때

각 유형의 특성은 각 유형에서 긍정적, 부정적으로 반응한 항목들(일반적으로 표준점수인 Z-score가 ± 1 이상인 항목)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박경수, 2006: 57~58). 이 연구에서는 각 인식유형의 특성을 Z-score를 기준으로 극단으로 나타나는 6개의 진술문을 중심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각 인식유형별로 구별되는 진술문들 역시 인식유형의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진술문도 인식유형 특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1) 유형 A - 전사회대상 생활양식전환 추구형

이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이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과 반대하는 진술문들은 <표 9>와 같다. 이중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6개는 31번 진술문(기후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활방식이 바뀌어야 해결된다. $Z=1.633$), 11번 진술문(지금은 “기후변화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이다. $Z=1.491$), 32번 진술문(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선진국들이 큰 책임을 가지고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Z=1.393$), 29번 진술문(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Z=1.236$), 24번 진술문(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Z=1.127$), 9번 진술문(기후변화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활동 때문이다. $Z=1.125$)이다.

가장 반대한 진술문 6개는 30번 진술문(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 $Z=-2.023$), 23번 진술문(경제가 발전하면 기후변화는 해결될 수 있다. $Z=-1.737$), 20번 진술문(기후변화의 영향은 일부지역, 일부사람들에게만 심각한 문제이다. $Z=-1.676$), 6번 진술문(지구는 훼손에 대한 강력한 복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Z=-1.649$), 5번 진술문(현재의 기후변화정도(지구평균온도 0.74°C 상승)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Z=-1.402$), 1번 진술문(기후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Z=-1.301$)이다.

〈표 9〉 유형 A의 대표적 진술문과 Z-score

진술문	Z-score
동의 진술문	
31. 기후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활방식이 바뀌어야 해결된다.	1.633
11. 지금은 “기후변화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이다.	1.491
32. 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선진국들이 큰 책임을 가지고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1.393
29.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1.236
24.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1.127
9.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활동 때문이다.	1.125
19. 기후변화는 새로운 사회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1.032
38.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에 너무 소극적이다.	1.019
반대 진술문	
30.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	-2.023
23. 경제가 발전하면 기후변화는 해결될 수 있다.	-1.737
20. 기후변화의 영향은 일부지역, 일부사람들에게만 심각한 문제이다.	-1.678
6. 지구는 훼손에 대한 강력한 복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1.649
5. 현재의 기후변화정도(지구평균온도 0.74℃ 상승)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1.402
1. 기후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1.301
4. 기후변화는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알려지고 있다.	-1.292
15. 나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다.	-1.268
39.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다.	-1.122
21. 지금보다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이상기후가 더 빈번히 일어나더라도 인류는 그 상황에 적응하며 잘 살아 갈 것이다.	-1.027

동의·반대 진술문 12개를 종합해 보면, 무엇보다 유형 A에 속한 응답자들은 인간의 행동, 생활방식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 때문이며(9),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활방식이 바뀌어야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31).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며(20), 지금의 기후변화정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5), 지구의 복원성 때문에 기후변화를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6).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이 큰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32). 이 유

형에서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24) 경제발전 역시 기후변화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평가되었다(23).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2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였다(30).

유형 A의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유형 A의 다른 유형들과 가장 구분되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유형 A에 속한 응답자들은 기후변화대응에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에 유형 D보다는 약하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33).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는데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27). 또한 기업이나 사업체가 개인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데 유형 B, C보다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며(16),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데 유형 B, D에 비해 중립적으로 평가하였다(10). 기후변화 대응이 정부정책의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하며,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기후변화가 해결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44, 26).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도 기후변화대응이 가능하다는 진술문에는 다른 인식유형들에 비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다른 인식유형들에 비해 부정적이었다(45, 3). 국제적으로 기후변화보다 더 긴박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인식유형들은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나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36). 평소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유형 B, D에 비해 덜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종합해보면, 유형 A의 인식유형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원인을 인간의 행동, 생활방식과 연관 지어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시장원리나 경제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사람의 행동에 직접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에 유형 A는 ‘전사회대상 생활양식전환 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10〉 유형 A와 타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Z-score

진술문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33	3	0.99*	-3	-0.98	1	0.44	5	1.72
27	2	0.72*	-1	-0.12	0	0.08	0	-0.28
16	2	0.72	-2	-0.44	-1	-0.25	4	1.34
10	1	0.67	-3	-0.95	1	0.28	-5	-1.74
44	1	0.54*	-4	-1.15	-1	-0.30	-2	-0.62
26	1	0.47*	-4	-1.52	-1	-0.30	-3	-0.79
45	-1	-0.05*	2	0.73	2	0.48	3	1.23
36	-1	0.23*	4	1.32	2	0.52	3	1.00
17	-1	-0.49*	3	1.08	-5	-1.68	2	0.51
3	-1	-0.53*	1	0.37	3	1.17	4	1.46
20	-5	-1.68	-3	-0.97	-3	-1.11	-5	-2.26

*는 $P < 0.01$, 그 외는 모두 $P < 0.05$

2) 유형 B - 소집단주도 현실개혁 추구형

이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이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과 반대하는 진술문들은 <표 11>과 같다. 가장 동의하는 6개는 42번 진술문(기후변화는 국제, 국가적 수준의 대응보다 지역, 공동체적 대응이 효과적이다. $Z=1.641$), 24번 진술문(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Z=1.614$), 11번 진술문(지금은 “기후변화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이다. $Z=1.521$), 36번 진술문(기후변화 보다 더 긴급한 국제적 문제들이 있다. $Z=1.323$), 38번 진술문(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에 너무 소극적이다. $Z=1.168$), 37번 진술문(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별 관심을 끌지 못한다. $Z=1.109$)이다.

반면 가장 반대하는 진술문 6개는 30번 진술문(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 $Z=-2.192$), 22번 진술문(온실가스를 과감하게 감축할수록 경제성상에 도움이 된다. $Z=-1.706$), 23번 진술문(경제가 발전하면 기후변화는 해결될 수 있다. $Z=-1.651$), 26번 진술문(기후변화가 초래한 위기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Z=-1.521$), 44번 진술문(기후변화 대응은 정부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이 되어야한다. $Z=-1.510$), 40번 진술문(정부정책을 통한 엄격한 규제만이 기후변화로 인한 파멸을 막을 수 있다. $Z=-1.428$)이다.

〈표 11〉 유형 B의 대표적 진술문과 Z-score

진술문	Z-score
동의 진술문	
42. 기후변화는 국제, 국가적 수준의 대응보다 지역, 공동체적 대응이 효과적이다.	1.641
24.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1.614
11. 지금은 “기후변화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이다.	1.521
36. 기후변화 보다 더 긴급한 국제적 문제들이 있다.	1.323
38.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에 너무 소극적이다.	1.186
37.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별 관심을 끌지 못한다.	1.109
32. 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선진국들이 큰 책임을 가지고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1.090
18. 최근에 발생한 이상 기후현상(이상고온, 태풍, 홍수, 폭설 등)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1.088
17. 내가 평소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1.083
4. 기후변화는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알려지고 있다.	1.071
43. 기후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보다는 기후변화 적응정책부터 강구해야 한다.	1.005
반대 진술문	
30.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	-2.192
22. 온실가스를 과감하게 감축할수록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1.706
23. 경제가 발전하면 기후변화는 해결될 수 있다.	-1.651
26. 기후변화가 초래한 위기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1.521
44. 기후변화 대응은 정부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이 되어야한다.	-1.510
40. 정부정책을 통한 엄격한 규제만이 기후변화로 인한 파멸을 막을 수 있다.	-1.428
8. 과도한 소비로 인해 기후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1.287

이 유형의 동의·반대 진술문 12개를 종합해 보면, 이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탈시장, 비정부, 소규모 대응 방식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24), 온실가스를 과감하게 감축하여도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22), 경제발전이 기후변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23). 그리고 기후변화는 국제, 국가적 수준보다 지역, 공동체적 수준의 대응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42), 정부 정책과 정치 관련한 진술문인 기후변화가 초래한 위기는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진술문(26), 기후변화 대응은 정부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진술문(44), 정부정책을 통한 엄격한 규제만이 기후변화인한 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진술문(40) 모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주도의 대응보다는 작은 단위에서의 기후변화대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의 모습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하였으며(38), 기후변화에 대한 경도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별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등(37) 현재의 기후변화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도 보여주었다. 기후변화보다 더 긴급한 국제적 문제들이 있으며(36), 기후변화대응이 정부정책의 일차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44)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인식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기후변화대응보다 더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나, 에너지수요관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유형 B의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유형 B의 다른 유형들과 가장 구분되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어느 유형보다 지역·공동체적 대응을 추구한다(42).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기후변화가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후변화 정보나 과학에 대한 불신의 모습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4). 기후변화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에 다른 인식유형들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유형 B에서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43). 기후변화에 대한 과감한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46), 현재의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에도(39) 유형 B의 응답자들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다른 인식유형들에서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유형 B에서는 이 진술문에 대해 중립적인 평가를 하였다(1). 부유할수록 기

후변화대응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유형 B의 응답자들만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33). 또한 유형 B에서만 기후변화가 과도한 소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평가하였고(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와 정부에 관련한 40번, 44번, 26번 진술문에 대해서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강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를 과감하게 감축할수록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 다른 유형들에서는 -2로 약한 부정을 보였지만, 유형 B에서만 유독 -5로 강한 부정을 보임으로써 기후변화와 경제를 분리해서 보려는 관점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표 12〉 유형 B와 타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Z-score

진술문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42	0	0.09	5	1.64*	1	0.27	-4	-1.30
4	-3	-1.29	3	1.07*	-4	-1.49	0	-0.11
43	-2	-0.93	2	1.00*	-2	-0.47	-2	-0.46
46	-2	-0.55	2	0.96*	0	-0.07	-2	-0.42
39	-3	-1.12	2	0.74*	-2	-1.05	-4	-1.24
3	-1	-0.53	1	0.37	3	1.17	4	1.46
9	4	1.13	1	0.09	3	1.30	-2	-0.76
1	-4	-1.30	0	0.02*	-3	-1.20	-4	-1.41
14	1	0.62	-1	-0.16*	3	1.10	2	0.89
2	1	0.50	-1	-0.38	0	0.24	2	0.59
10	1	0.67	-3	-0.95	1	0.28	-5	-1.74
33	3	0.99	-3	-0.98*	1	0.44	5	1.72
8	2	0.70	-3	-1.29*	1	0.39	-1	0.36
40	0	0.03	-4	-1.43*	-1	-0.28	-1	-0.38
44	1	0.54	-4	-1.51	-1	-0.30	-2	-0.62
26	1	0.47	-4	-1.52	-1	-0.30	-3	-0.79
22	-2	-0.53	-5	-1.71*	-2	-0.68	-2	-0.54

*는 P<0.01, 그 외는 모두 P<0.05

종합해보면, 유형 B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들, 정치적 의견들에 비판적이었으며, 경제와 관련한 진술문들에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큰 범위나 단위보다는 작은 단위와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것을 추구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의 모습들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였다. 그래서 유형 B는 ‘소집단주도 현실개혁 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 유형 C - 개인 중심·적극적 대응 추구형

유형 C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기후변화 현상과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가 높고,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개인적 입장에서 매우 적극성을 보이는 인식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진술문과 반대하는 진술문들은 <표 13>과 같다. 유형 C의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6개는 11번 진술문(지금은 “기후변화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이다. $Z=1.576$), 35번 진술문(시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어야 한다. $Z=1.551$), 28번 진술문(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성 증대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다. $Z=1.473$), 31번 진술문(기후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활방식이 바뀌어야 해결된다. $Z=1.446$), 29번 진술문(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Z=1.329$), 18번 진술문(최근에 발생한 이상 기후변화(이상고온, 태풍, 홍수, 폭설 등)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Z=1.324$)이다.

가장 반대하는 진술문 6개는 6번 진술문(지구는 훼손에 대한 강력한 복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Z=-1.761$), 17번 진술문(내가 평소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Z=-1.683$), 7번 진술문(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증거는 믿을만하지 않다. $Z=-1.591$), 15번 진술문(나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다. $Z=-1.499$), 4번 진술문(기후변화는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알려지고 있다. $Z=-1.488$), 12번 진술문(기후변화가 심각한 것을 알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Z=-1.327$)이다.

<표 13> 유형 C의 대표적 진술문과 Z-score

진술문	Z-score
동의 진술문	
11. 지금은 “기후변화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이다.	1.576
35.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어야 한다.	1.551
28.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성 증대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다.	1.473

31. 기후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활방식이 바뀌어야 해결된다.	1.446
29.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1.329
18. 최근에 발생한 이상 기후변화(이상고온, 태풍, 홍수, 폭설 등)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1.324
9.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활동 때문이다	1.301
3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1.174
3. 기후변화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1.172
14.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정책을 따르겠다.	1.098
반대 진술문	
6. 지구는 훼손에 대한 강력한 복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1.761
17. 내가 평소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1.683
7.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증거는 믿을만하지 않다.	-1.591
15. 나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다.	-1.499
4. 기후변화는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알려지고 있다.	-1.488
12. 기후변화가 심각한 것을 알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1.327
1. 기후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1.205
20. 기후변화의 영향은 일부지역, 일부사람들에게만 심각한 문제이다.	-1.113
30.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	-1.111
5. 현재의 기후변화정도(지구평균온도가 0.74℃ 상승)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1.104
39.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다.	-1.048

유형 C의 가장 동의·반대 진술문 12개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알 수 있다. 우선, 유형 C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기후변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11번 진술문(지금은 “기후변화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이다.)의 Z-score가 다른 인식유형들에 비해 유형 내에서 가장 높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증거는 믿을 수 있고(7), 기후변화는 의도적으로 과장되어 알려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4).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이상 기후현상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18), 지구의 강력한 복원성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6). 유형 C는 개인적 수준에서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유형 C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15), 평소에 개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고(17),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12).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35). 기후변화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활방식이 바뀌어야 하는데(31), 이 유형에서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성 증대를 그 핵심적인 방안으로 생각했으며(28),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29).

유형 C의 통계적으로 구별되는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작은 행동변화가 기후변화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에 다른 인식유형들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유형들 중 개인적 수준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부유할수록 기후변화 대응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에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33),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에 다른 인식유형들에 비해 조금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24).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증거들에 대해서 다른 인식유형에 비해 매우 강한 신뢰를 보였으며(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른 인식유형들 보다 비교적 명확히 알고 있다고 유형 C의 응답자들은 평가하였다(17).

<표 14> 유형 C와 타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Z-score

진술문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13	0	0.36	1	0.28	2	0.99	-3	-0.76
33	3	0.99	-3	-0.98	1	0.44*	5	1.72
10	1	0.67	-3	-0.95	1	0.28	-5	-1.74
24	4	1.13	5	1.61	-1	-0.22	1	0.33
23	-5	-1.74	-5	1.65	-2	-0.93	1	0.10
7	-2	-0.84	0	-0.04	-5	-1.59*	-1	-0.36
17	-1	-0.49	3	1.08	-5	-1.68*	2	0.51

*는 P<0.01, 그 외는 모두 P<0.05

종합해보면, 유형 C는 기후변화대응에 어느 유형보다 적극적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개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개인적 수준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나 과학적 증거들에 대한 신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더 정확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였다. 이에 유형 C는 ‘개인 중심·적극적 대응 추구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4) 유형 D - 원인자중심 시장기반 대응 추구형

유형 D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추구하는 방식이 앞의 유형 C와 큰 차이를 보인다. 유형 D의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진술문과 반대하는 진술문은 <표 15>와 같다. 이중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6개는 32번 진술문(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선진국들이 큰 책임을 가지고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Z=2.085$), 35번 진술문(시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어야 한다. $Z=1.767$), 33번 진술문(부유할수록 기후변화 대응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 $Z=1.719$), 28번 진술문(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성 증대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다. $Z=1.477$), 3번 진술문(기후변화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Z=1.465$), 16번 진술문(기후변화는 개인보다 기업이나 사업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Z=1.341$)이다.

반면 가장 반대하는 진술문 6개는 20번 진술문(기후변화의 영향은 일부지역, 일부사람들에게만 심각한 문제이다. $Z=-2.257$), 10번 진술문(기후변화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다. $Z=-1.740$), 30번 진술문(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 $Z=-1.616$), 42번 진술문(기후변화는 국제, 국가적 수준의 대응보다 지역, 공동체적 대응이 효과적이다. $Z=-1.297$), 39번 진술문(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다. $Z=-1.238$), 1번 진술문(기후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Z=-1.140$)이다.

〈표 15〉 유형 D의 대표적 진술문과 Z-score

진술문	Z-score
동의 진술문	
32. 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선진국들이 큰 책임을 가지고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2.085
35.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어야 한다.	1.767
33. 부유할수록 기후변화 대응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	1.719
28.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성 증대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다.	1.477
3. 기후변화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1.465
16. 기후변화는 개인보다 기업이나 사업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1.341
45. 적은 비용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1.227
11. 지금은 “기후변화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이다.	1.205
36. 기후변화 보다 더 긴급한 국제적 문제들이 있다.	1.003
반대 진술문	
20. 기후변화의 영향은 일부지역, 일부사람들에게만 심각한 문제이다.	-2.257
10. 기후변화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다.	-1.740
30.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	-1.616
42. 기후변화는 국제, 국가적 수준의 대응보다 지역, 공동체적 대응이 효과적이다.	-1.297
39.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다.	-1.238
1. 기후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1.140
6. 지구는 훼손에 대한 강력한 복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없다.	-1.023

유형 D의 가장 동의·반대 진술문 12개를 살펴보면 유형 D는 기후변화대응의 책임과 관련한 진술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유형 D에 속한 응답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선진국들이 큰 책임을 가지고 더 적극적이어야 하며(32), 부유할수록 기후변화 대응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33). 또한 기후변화는 개인보다 기업이나 사업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며(42), 지역·공동체적 대응보다는 국제·국가적 수준의 대응이 기후변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42). 그리고 현재 국제사회가 지불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

한 비용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39). 즉 더 많은 비용을 쓰거나 지금의 수준을 유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가 일부지역, 일부사람들에게만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강하게 부정하였고(20), 기후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1).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자본의주의 시장경제로 보지는 않았다(10).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3),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성 증대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라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28).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30).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시민들에게 정확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35).

유형 D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통계적으로 다른 유형들과 구별되는 진술문들을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선진국들이 큰 책임을 가지고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유형 D의 응답자들은 유형 A와 같이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을 부여하였는데, 유형 A보다 높은 Z-score를 보여주어 유형 A의 응답자들 보다 더 강한 긍정을 보여주었다(32). 마찬가지로 부유할수록 기후변화 대응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33),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사업체가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도(16) 유형들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후변화대응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제가 발전하면 기후변화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 다른 유형들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유형 D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었다(23). 기후변화가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에는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4).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것에 다른 유형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유형 D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9). 나의 작은 행동변화가 기후변화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에는 다른 유형들 보다 강하게 부정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개인보다는 큰 단위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응답자들 스스로 앞의 책임과 관련한 내용들을 지지해주고 있다(13). 또한 기후변화는 국제·국가적 수준의 대응이 지역·공동체 수준의 대응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42). 그리고 다른 유형들보다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10), 기후변화의 영향이 일 부지역, 일부사람들에게만 미친다는 것 역시 다른 유형에서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20).

〈표 16〉 유형 D와 타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Z-score

진술문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32	5	1.39	3	1.09	2	0.72	5	2.08*
33	3	0.99	-3	-0.98	1	0.44	5	1.72*
16	2	0.72	-2	-0.44	-1	-0.25	4	1.34
24	4	1.13	5	1.61	-1	-0.22	1	0.33
23	-5	-1.74	-5	-1.65	-2	-0.93	1	0.10*
18	2	0.90	3	1.09	4	1.32	1	-0.11*
4	-3	-1.29	3	1.07	-4	1.49	0	-0.11*
8	2	0.70	-3	-1.29	1	0.93	-1	-0.36*
9	4	1.13	1	0.09	3	1.30	-2	-0.76
13	0	0.36	1	0.28	2	0.99	-3	-0.76*
42	0	0.09	5	1.64	1	0.27	-4	-1.30*
10	1	0.67	-3	-0.95	1	0.28	-5	-1.74
20	-5	-1.68	-3	-0.97	-3	-1.11	-5	-2.26

*는 $P<0.01$, 그 외는 모두 $P<0.05$

종합해보면, 유형 D는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책임과 적극성을 개인이나 자신이 아닌 국제사회, 선진국, 기업체, 부유한 사람 등에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유형은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시장경제체제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평가하였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기후변화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에 미루어 유형 D를 ‘원인자중심 시장기반 대응 추구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3 절 인식유형의 의의와 특성의 설명

1. 인식유형의 의의

PQMethod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된 인식유형별 특성들을 기반으로 각 인식

유형을 <표 17>과 같이 의의를 내릴 수 있다. 각 인식유형의 의의는 표준점수 (Z-score)가 높은 문항과 다른 인식유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문항을 근거로 기술한 것이다.

유형의 의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진술문의 내용이나 해석상의 내용들이 유형간에 중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바’를 정리한 것으로 하나의 차원에서 완전히 상호배타적 분류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Q방법론에서 유형의 특성은 인식의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며, 같은 진술이라도 해당 유형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같은 분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박경수, 2006).

〈표 17〉 인식유형의 의의

유 형	의 의
전사회대상 생활양식전환 추구형	현재의 기후변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것이며,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은 인간의 활동과 생활방식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나 경제발전 방식이 아닌 정치적 의지를 통한 정부정책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사람의 행동에 직접적인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소집단주도 현실개혁 추구형	지금의 정부나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방식을 비판하며 특히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시장원리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들에 매우 반대한다. 기후변화대응은 비정부, 탈경제적 방식으로 지역이나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작은 범위의 대응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개인중심 에너지 전환 추구형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와 과학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며 내가 평소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신경을 쓴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더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은 인간 생활방식의 변화와 재생가능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수요관리, 효율성의 증대에 있다.
원인자중심 시장기반 대응 추구형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두지 않으며, 기후변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대응은 개인이나 지역의 작은 단위 보다 큰 단위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이에 주요 선진국, 기업이나 사업체, 부유한 사람들이 큰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성의 증대가 필수적이다.

2. 인식유형별 전형적 응답자

각 인식유형의 특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된 이유 등의 확인을 위해 전형적 응답자들과의 사후 면담(post-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전형적 응답자는 PQMethod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된 결과에서 각 인식유형별 요인 적재치가 가장 높은 두 명으로 선정되었다. 각 인식유형별 전형적 응답자는 <표 18>과 같다.

<표 18> 인식유형별 전형적 응답자

인식유형	ID	성별	나이	직업	환경 관련성	학력	문화적 편향
유형 A	s2	여	35	농업	상	대졸	평등주의
	s16	여	28	인권 운동가	하	대졸	평등주의
유형 B	s6	남	38	환경컨설팅	상	석사	평등주의
	s34	여	24	회사원	하	대졸	개인주의 + 평등주의
유형 C	s27	남	39	연구원	상	박사	개인주의 + 평등주의
	s45	남	29	대학원생	상	대졸	개인주의 + 평등주의
유형 D	s21	남	54	서울시 공무원	상	대졸	개인주의
	s24	남	29	교육 공무원	하	대졸	개인주의

1) 유형 A의 전형적인 응답자

분석결과 응답자 2와 응답자 16이 유형 A의 전형적인 응답자로 나왔다. 응답자 2는 현재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으며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자 16은 현재 참여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운동가로서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자 2는 11번, 31번, 44번 진술문에 +5점을, 33번, 34번, 27번 진술문에 +4점을 주었다.

“시골에 살다보니 농부들이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변수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몇 년째 농부들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되고 있고 작물을 다루는 방식도 계속 변할 수밖에 없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매우 시급하게 이 문제를 지금부터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개입한다고 해서 쉽게 빨리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삶의 스타일이나 이런 지금의 전기를 많이 쓴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사람이 동시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지금 그 변화가 얼마나 올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시작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부유하다는 것은 지금사회에서는 더 많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여러 산업화 활동에 참여하고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기후변화 문제가 단순히 좀 더 생태적이고, 기후변화를 야기한 산업화 문명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이나 그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배제되었을 때는 이전처럼 기계적이고 국가주의적으로 일방적으로 강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포함한 대안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민주주의 성장이 수반되어서 가야만 궁극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응답자 2는 5번, 6번, 30번 진술문에 -5점을, 20번, 15번 30번 진술문에 -4점을 주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위험을 후세대에게 물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윤리를 가지고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전기 소모를 또한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삶을 지속화하고 길들여져서 이런 삶의 패턴을 가지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재앙은 닥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술적 대안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그런 생태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과 그런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응답자 16은 10번, 31번 38번 진술문에 +5점을, 19번, 24번, 27번 진술문에 +4점을 주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같은)이러한 시스템들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도 대량생산을 해서 비용대비 효율만 생각해서, 그 외에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라든가 환경적인 비용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잖아요. 대량생산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것들도 많고, 이익 우선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니까 이런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악영향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기후변화 회의에 가거나 하는 것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중략) 대표적으

로 4대강 사업을 봐도 그렇고 환경적인 것들을 우선시해서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략) 입법 활동 같은 것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 (환경이나 기후변화가) 걸쳐져 있는 것인데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도 큰 국책사업을 할 때도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소극적이라 생각했어요.”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두가 결정과정이나 이런 것에 참여할수록 일단 정부나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이나 정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변화대응이 더 효율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원자력 발전은 전체적으로 폐기물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전혀 계산이 안 되고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에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대로 분석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다 따져 봤을 때 기후변화대응이나 환경에 원자력 발전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원자력 발전 같은 체제에서 벗어나서 바뀌어서 대체에너지나 재생가능에너지의 방식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응답자 16은 6번, 23번, 30번 진술문에 -5점을 주었고, 5번, 20번, 42번 진술문에 -4점을 주었다.

“국경은 나뉘어져 있지만 강이나 대기 같은 환경적인 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지역이나 공동체적으로 작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략) 어떤 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대응한다고 해도 그 옆에 있는 나라에서 그렇지 않다면 바뀌기 어려운 것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0.74℃변화에 대해서는).그렇게 조금씩 상승하는데도 북극이나 남극에서 빙하가 많이 녹아서 전체적으로 여름에 더 더워지고 겨울에 더 추워지는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기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 것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기후가 상승해서 북극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섬 같은 곳들이 수장되고 이런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작은 온도 변화도)심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심층면담 내용을 보면 유형 A의 대표적인 특성인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생활방식·행동의 변화 요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민주주의방식의 필요성 등이 잘 나타나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강한 부정도 확인할 수 있다.

2) 유형 B의 전형적인 응답자

유형 B의 전형적인 응답자로 응답자 6과 응답자 34가 분석결과 나왔다. 응답자 6은 **환경컨설팅 회사의 대표이사로 환경관련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응답자 34는 **회사 회사원으로 마케팅과 관련한 콘텐츠제작업무를 하고 있다. 응답자 6은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을, 응답자 34는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자 6은 18번, 36번, 43번 진술문에 +5점을 주었고, 4번, 39번 42번에 +4점을 주었다.

“확실히 이상기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실제로 수온이 상승했다든지, 기류가 바뀌었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기후변화에 의한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현상들은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문제보다 국제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구요 예를 들면 빈곤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런 정치사회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데 기후변화 쪽 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가 확실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감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는 사실 별로 기대치가 높지 않구요. 대신 기후변화는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응이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아주 거시적으로 적응대책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접근을 해야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적응대책은 있지만 그것이 지역단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재방을 높이 쌓는 다든지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범위에서 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거죠.”

응답자 6은 22번, 30번, 44번 진술문에 -5점을 주었고, 8번, 23번, 33번 진술문에 -4점을 주었다.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단지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이나 어떤 국제인식에 동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성장하고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절대 미래사회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제시하는 정책이야 말로 아주 형편없는 정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원죄의식을 좀 심어줄려는 약간은 잘못된 문장이 아닌가. 과도한 소비는 다른 문제를 낳지 과도한 소비가 그 기후변화하고 직결된다

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를 줄이는게 커다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제성장이라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자 34는 11번, 24번, 38번 진술문에 +5점을 주었고, 17번, 19번, 35번 진술문에 +4점을 주었다.

“시장원리보다는 인식개선이나 캠페인적 공익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제일 먼저일 것 같고,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자연훼손을 중단시키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사람들이 만든 것이 사람이 자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것을 먼저 고쳐나가면 시장경제도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인식개선이 우선이라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소극적이지. 땅을 파고, 강을 파는 등 경제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공익광고적인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소극적인거지 오히려 IT 기술의 판매라든가 외국시장에서 경제적인 이윤을 얻는데 집중하고 있고 이산화탄소배출도 많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소극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내가 평소에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해)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나 스스로도 알고는 있지만 뿌리 속에 박혀있지 않은거지. (중략) 알고 있어도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그런 환경정책들이 깊이 스며있지 않다라는 것이지.”

응답자 34는 26번, 30번, 40번 진술문에 -5점을, 8번, 10번, 39번에 -4점을 주었다.

“규제가 다는 아닌거지. 그러면 왜 불법이 존재하고 처벌이 존재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키고 있지 않는 나라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라는 것은 좀 말이 안된다는 거야.”

“원자력 발전이 과연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터 들어. 그러니까 원자력은 이미 그 땅을 못 쓰게 만드는 건데 몇 만 년을.... 그런데 그런 원자력 발전이 왜 환경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인 것이지, 이미 옛날에도 시장경제와 같은 방식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와서 자본주의와 기후변화를 매치시킨다는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중략) 경제원리에서 기후변화나 자연파괴가 시작되었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규제나 정책적인 것들 보다는 훨씬 더 공익적이고 사람들 생활에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상의 심층면담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형 B에 속한 응답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현재의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경제와 기후변화를 연결하는 모습들에 강한 부정을 보였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3) 유형 C의 전형적인 응답자

유형 C의 전형적인 응답자는 응답자 27과 응답자 45이다. 응답자 27은 에너지와 관련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자이다. 응답자 45는 환경과 관련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다. 두 사람의 문화적 편향 측정설문에서 개인주의와 평등주의에 같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 두 문화적 편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응답자 27은 3번, 11번, 35번 진술문에 +5점을 주었고, 28번, 29번, 34번 진술문에 +4점을 주었다.

“자꾸 위기라고 생각하면 또 계속 수동적으로 피하려고 하게 되는 거고, 피하면 피할수록 기후변화는 남의 일이 되는거니까... 기회로 인식하면서 해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완화랑 연결될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정보전달 이렇게 필요하겠 다. 기후변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자연과학도 있는 것이고 사회과학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보들이 잘 전달되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움직 일 수 있는 거니까. 정보전달이 필요하니까 정보전달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교육 하면서 완화와 관련한 교육들이 전달이 되면 좋겠다 싶은 것이고...”

“기후변화 완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핵심이 수요관리와 수요관리를 하더라도 결국 공급 쪽에서 필요하니까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인가 아닌가 하면 계속 Fact 논쟁으로 가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는데 이제는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자 27은 4번, 7번, 15번 진술문에 대해서 -5점을, 5번, 17번 39번 진술문에 -4점을 주었다.

“(기후변화가) 과장되게 부각되고, 알려져 있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너무 기후변화대응이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 이것을 기회로 여긴다면 경

제적 부담도 줄이고, 관련 일자리도 늘리고 뭐 그러면서 완화라고 하는 것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도 책임이 있는 거지 뭐. 한국사람 1/n 하면 다 12톤 배출하고 하니까. (중략) 내가 얼마나 배출하는지... 뭐 신경은 쓰죠. 12톤 이런거... 실제로 내가 12톤인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산업 활동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식하도록 자꾸 부각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제사회가)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비용만큼도 아직 지불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적극대응하거나 기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투자가 필요한 것인데 기존에 하던 것들만 하려고 하고, 투자가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응답자 45는 9번, 18번, 31번 진술문에 +5점을, 34번, 35번, 42번 진술문에 +4점을 주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자료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통해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중략) 인간이 야기한 원인이 커다랄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생활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의 기후정의적 측면에서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기후변화는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한다.”

“커다란 단위의 수치적인 감소보다는 근본적으로 생활의 양식을 바꾸는 단위가 지역·공동체적 대응에서 더 잘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평소에 엘리베이터를 적게 사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반드시 걸어가는 중 온실가스에 대해 신경 쓰는 편이라 생각한다.”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는)알아야 대응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중략) 정확한 정보는 시민의 알 권리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문 사회적 변화가 파생적으로 많이 야기되지만 그의 가장 기본은 정확한 과학적 정보이다.”

응답자 45는 12번, 15번, 17번 진술문에 -5점을, 6번, 20번, 23번 진술문에 -4점을 주었다.

“현대인에게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구가 가진) 훼손에 대한 복원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략) 기후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으로 처음에는 일부지역, 일부사람들에게만 피해가 편중될 수 있지만 결국 모두에게로 확산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의 면담내용을 종합하면, 이들에게서 유형 C의 특성을 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신뢰가 높다. 그리고 개인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많이 알아야 더 많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해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 수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4) 유형 D의 전형적인 응답자

유형 D의 전형적인 응답자는 응답자 21과 응답자 24이다. 이들은 공무원인데, 응답자 21은 서울시에서 환경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응답자 24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두 사람 모두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자 24는 16번, 32번, 33번 진술문에 +5점을 주었고 38번, 40번, 45번 진술문에 +4점을 주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게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서 생긴 원인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의 노력보다도 국가나 기업에서 노력해서 스스로를 규제를 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줄게 끼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산림 자원이 많아 나무를 팔아서 돈을 버는게 많은데, 미국이나 이런 이미 부유한 선진국들이 스스로를 규제하는 것은 적으면서 아직 자연을 이용해서 개발해야하는 나라들한테 자꾸 규제를 하라고 압박을 하잖아요? (중략) 실질적으로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협약 같은데서도 미국이 탈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회피를 하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과 큰 단체를 비교를 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기껏해야 개인난방이나 교통을 좀 절약하는 것 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큰 기업이나 정부차원에서 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경과 개발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지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기업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략) 매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준다거나 하는 규제가 강해지면 기업들이 알아서 기술발전을 하든가 조심을 할텐데,... 너무 그런 쪽으로는 규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응답자 24는 13번, 30번, 39번 진술문에 -5점을, 1번, 8번, 20번 진술문에 -4점을 주었다.

“원자력 발전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쓰고 있긴한데 폐기물의 처리가 아직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어디 쌓아만 두고 있긴한데.... 그게 미래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이 가성비가 좋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폐기물 관련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화력발전보다 더 미래적으로 보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중략) 유럽 같은 경우 원자력 발전을 점차적으로 폐기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늘리고 있고 이게 원자력 발전도 결국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다고 생각을 해요. 원자력 발전소 보다는 이게 초반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은 많이 들어도 재생가능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해야한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기후에 많은 도움이 될꺼다 이렇게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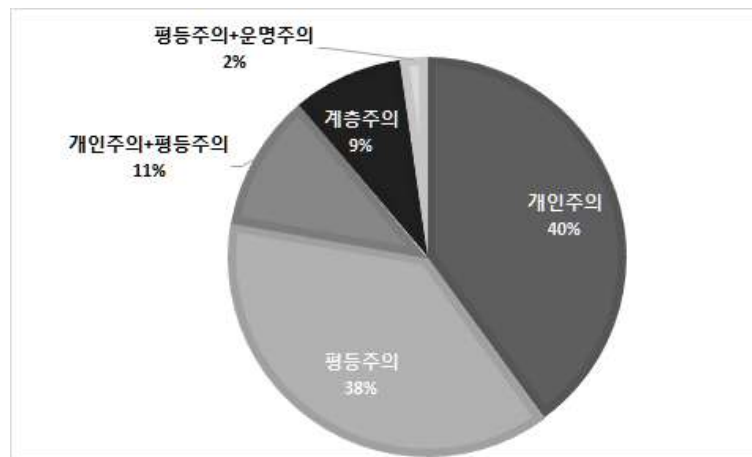
“과도한 소비로 인해 기후변화가 발생했다는 문장이 마치 개인한테 책임을 무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개인의 소비가 아예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소비가 지금이랑 같더라도 생산하는 방식을 많이 개선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소비한 물품들이 다시 재활용이 된다는 거 아니면 쓰레기가 되었을 때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다시 자연으로 환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개인소비자체에 책임을 무는 것은 정부나 큰 단체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응답자 24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의 원인이 과도한 소비나,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개인수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 방안들은 영향력이 적다고 판단하여 기업체나 사업체,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후변화에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 기후변화대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는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인식유형과 문화적 편향

이 연구는 ‘위험의 사회구성주의’와 ‘문화이론’의 두 가지를 이론적 배경으로 문화적 편향이 기후변화인식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그리고 응답자가 가진 문화적 편향을 기후변화인식에 대한 설명요인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Q조사와 함께 개인의 문화적 편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을 함께 실시하였다.³⁰⁾ 45명의 응답자의 문화적 편향의 측정결과는 <그림 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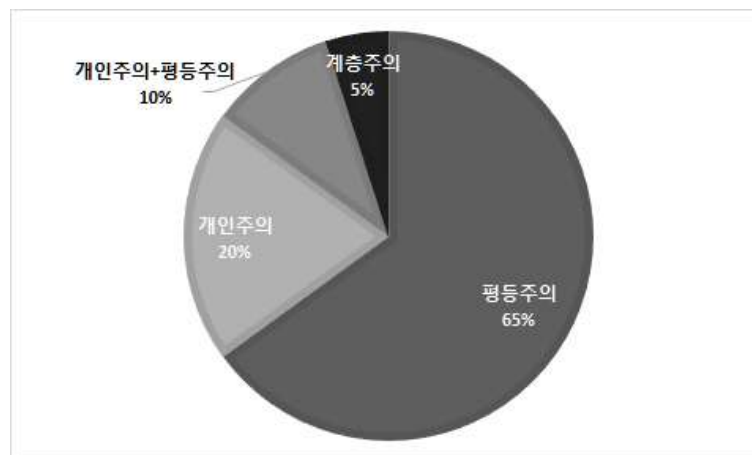
<그림 5> 응답자의 문화적 편향

응답자들 중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이 38%, 계층주의 문화적 편향이 9% 순으로 나타났다. 순수한 운명주의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Dake & Wildavsky(1992), Dake(1992), Marris et al.(1998) 등의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현대사회에서 운명주의 문화적 편향을 가진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45명의 응답자 중에서 순수한 운명주의 문화적 편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45명의 응답자 대부분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운명주의 문화적 편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개인주의와 평등주의의 문화적 편향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 11%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적 편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평등주의와 운명주의의 문화적 편향

30) 5점 척도 12문항(문화적 편향별 3개의 문항 X 4)

을 동시에 가진 사람도 2%로(1명) 측정되었다.³¹⁾

인식유형의 설명요인으로 문화적 편향을 사용하기 위해 우선 각 인식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문화적 편향을 살펴보았다. 유형 A(전사회대상 생활양식전환 추구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문화적 편향은 전체 20명 중 13명이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을, 4명이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을, 2명이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을 동시에 보였으며, 1명이 계층주의 문화적 편향을 보여주었다. 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은 <그림 6>과 같다. 이에 유형 A는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유형 A에 속한 응답자들의 문화적 편향

유형 B(소집단주도 현실개혁 추구형)에 속한 응답자는 총 3명인데 이들의 문화적 편향은 3명 모두 달랐다. 평등주의, 평등주의와 운명주의, 개인주의와 평등주의로 각각 나뉘어졌다. 유형 C(개인중심 에너지 전환 추구형)에 속한 응답자는 총 10명이며 이들 중 3명이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을, 3명이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을, 2명이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을 동시에 보여주었고, 2명이 계층주의 문화적 편향을 보여주었다. 이에 유형 C는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에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형 D(원인자중심 시장기반 대응

31) 하지만 이러한 수치가 한국인 전체의 문화적 편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45명 응답자의 문화적 편향 비율만 나타낸 것으로 응답자의 수에 따라 비율은 바뀔 수 있다.

추구형)는 총 5명의 응답자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모두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을 보여주었다. 유형 A, B, C가 모두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에 비해 유형 D에는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을 가진 사람만 있다는 것이 유형 D만의 특징이다.

이번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문화적 편향이 뚜렷이 드러나는 인식유형은 유형 A, 유형 C, 유형 D 세 개다. 유형 A는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유형 C는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두 가지 문화적 편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유형 D는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유형 B의 경우 응답자의 수가 적고, 이들의 문화적 편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어떤 문화적 편향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이에 유형 A, C, D의 인식 특성에 대해 문화이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³²⁾

1) 전사회대상 생활양식전환 추구형(유형 A)와 평등주의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전사회대상 생활양식전환 추구형’은 현재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지구의 훼손에 대한 강력한 복원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인간의 행동과 생활 방식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다른 방법 보다는 인간의 행동의 변화와 정치적 의지,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은 문화이론에서 제시한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다.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은 언제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고 손상되기도 싶다고 생각하며, 자연은 상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작은 흔들림에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의 기후변화현상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0.74℃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연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 다른 문화적 편향을 가진 사람들 보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인간과 자연은 상호연결 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현재의 인간 행동과 생활방식의 변화에 집중하고

32) 이 연구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인이 가지는 문화적 편향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 편향간의 중복을 인정하고, 다중자아라는 개념을 수용하였기에 일부의 각 인식유형과 특정 문화적 편향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였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시장이나 계층제와 같은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에 시장원리나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한 방식에 반대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개인중심 에너지 전환 추구형(유형 C)과 개인주의, 평등주의

‘개인중심 에너지 전환 추구형’의 특성을 보여주는 Z-score가 ± 1 이상인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이 유형이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에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³³⁾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유형 A에 속한 응답자들과 비슷하게 현재의 기후변화정도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지구의 강력한 복원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을 활동과 생활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활방식의 변화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자기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평소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신경을 쓰는 등 적극적인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유형 A와는 달리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에서 볼 수 있는 성향들도 함께 나타났다. 대표 진술문 중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보는 진술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은 사회를 시장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규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원리를 옹호하는데, 대표 진술문 속에서 시장원리나 경제적 수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진술문을 찾아 볼 수 없다. 시장원리와 기후변화대응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24번 문장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들보다 비교적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원인자중심 시장기반 대응 추구형(유형 D)과 개인주의

‘원인자중심 시장기반 대응 추구형’은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을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또한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보았다. 기후변화대응은 개인이나 지역

33) <표 11> 참조

의 작은 단위보다는 큰 단위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과 앞서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어느 인식유형보다 기후변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기후변화의 근본원인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이는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면 기후변화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 다른 유형들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었는데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문제나 자원문제에 대해 과학기술과 시장 기구를 통해 해결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평가를 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인식유형은 개인이나 지역 공동체 보다는 국제사회, 국가, 기업, 부유한 사람들 등이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개인 수준에서 적극성이나 시급성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자연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대표적 진술문과 통계적으로 구별되는 진술문 중 어느 것에서도 개인생활에 대한 규제나 규범, 국가 정책 등에 대한 표현들을 찾아 볼 수 없는 것도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4 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와 가설의 제시

1. 기후변화 인식의 다양성과 시사점

이 연구는 한국인의 높은 기후변화 인식수준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Q방법론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 각 분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45명을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45명의 인식은 네 가지로 유형화 되었다. 45명 중 20명이 ‘전사회대상 생활양식전환 추구형’(유형 A)에 속하고, 3명이 ‘소집단주도 현실개혁 추구형’(유형 B)에, 10명이 ‘개인 중심·적극적 대응 추구형’(유형 C)에, 마지막으로 5명이 ‘원인자중심 시장기반 대응 추구형’(유형 D)에 속하였다. 나머

지 7명은 한 가지 이상의 인식유형에서 높은 적재치를 보이며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인식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확인하였던 가장 논쟁적인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인식유형들이 얼마나 기후변화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4번 진술문(기후변화는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알려지고 있다.)에 대해서 유형 A와 유형 C는 -3점과 -4점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유형 B는 3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유형 D는 0점으로 중립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형 A와 C는 지금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와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신뢰가 높지만, 유형 B의 경우는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신뢰도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같은 정책이라도 유형 A와 C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수용성이 높을 수 있지만 유형 B나 D에 속한 사람의 경우 정책의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

42번 진술문(기후변화는 국제, 국가적 수준의 대응보다 지역, 공동체적 대응이 더 효과적이다.)에 대해서 유형 A는 0점으로 가장 중립적인 평가를, 유형 C는 1점으로 유형 A보다는 긍정적이지만 중립적인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유형 B는 5점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유형 D는 -4점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결과를 보면 유형 B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작은 단위의 지역, 공동체적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반면 유형 D의 경우 큰 단위나 범위인 국제사회나 국가적 수준의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두 인식유형간 극명한 인식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수립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국제, 국가적 수준의 대응이나 지역, 공동체적 대응 한 가지 방향으로만 정책을 수립한다면, 일부의 국민들이 강하게 반대하여 정책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효율성 역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나 집단의 구성원이 어떤 정책을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

17번 진술문(내가 평소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에 대해서 유형 B와 D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유형 C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유형 A는 비교적 중립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평가는 기후변

화대응에 대한 개인적 수준의 인식, 행동변화를 위한 의사(willingness) 등에 인식유형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형 C는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개인적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형 B나 D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적 입장에서의 기후변화대응은 소극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 대상자에 대한 규제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미 개인의 행동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규제도 수용성이 높을 수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규제에도 수용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인식유형의 특성들의 살펴보면 크게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 대응 수단, 기후변화의 대응 주체의 세 가지 측면에서 관점의 차이를 보였다. 인식유형의 관점을 비교한 내용은 <표 19>와 같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유형 A와 B에 속한 사람들에게 현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들은 수용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유형 C와 D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수용성도 높고 그에 따른 정책의 효율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형 A와 C의 경우 에너지 수요관리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에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 유형 C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개인적 수준에 맞춘 정책들이 수용성이 높고 효과적일 수 있으며, 유형 D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반대가 될 수 있다. 오히려 큰 범위의 정책들이나 기업이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높은 수용성과 효율성을 보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모든 인식유형의 합의 진술문이다. 합의적 진술문 중 모든 인식유형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진술문은 11번 진술문(지금은 “기후변화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이다.)이다. 이는 미국인들의 기후변화인식을 유형화한 Anthony Leiserowitz et. al.(2008)의 연구나, J. Wolf et al.(2009)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미국인, 유럽인과 한국인들의 기후변화인식의 차이를 유추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즉, 기후변화에 대해 일부의 사람들이 기후변화 자체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보

인 미국이나 유럽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의심이나 부정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11번 진술문에 대한 긍정적인 합의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약 97%)이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는 기존의 환경부의 발표(2007, 2013)를 질적 연구를 통해서 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1번 진술문(전문가의 분석을 통한 결정보다는 일반국민들의 의견들이 포함된 기후변화정책이 더 효과적이다.)에 대해서는 모든 인식유형에서 중립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모든 응답자들이 기후변화정책이 전문가나 일반국민들의 한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설문과정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 진술문을 분류할 때 다음과 같은 반응들을 보여주었다.

“일반국민이 뭘 아냐? …(중략) 그래도 전문가가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해야지.”

-응답자 1

“적절히 섞여서 다루어져야 효과적이지 한 쪽의 생각만 믿을 수는 없어.”

-응답자 21

합의적 진술문 중 20번(기후변화의 영향은 일부지역, 일부사람들에게만 심각한 문제이다.), 30번(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진술문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먼저 20번 진술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것은 미국인의 경우 기후변화가 지리적으로나 일시적으로 특정사람 또는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Anthony A. Leiserowitz(2005)의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인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30번 진술문에 대한 모든 인식유형에서의 부정적인 평가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오는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9%로 높이고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총 41기의 원전을 가동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 한국정부가 제시한 가장 큰 근거 중의 하나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소시켜야 하는데 원전이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생활 또는 직업의 환경관련성 여부를 막론하고 원전이 기후변화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정부의 주장과 국민들의 인식에 큰 괴리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유추해볼 수 있다.

〈표 19〉 인식유형간 관점비교

구분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 대응 수단	기후변화 대응 주체
유형 A	인간 활동, 생활방식 찬성 자본주의 시장경제 찬성	민주주의적 정치수단 찬성 생활방식의 변화 찬성 에너지 수요관리 찬성 시장·경제적 수단 반대	-
유형 B	-	지역, 공동체적 대응 찬성 정치적 수단 반대 시장·경제적 수단 반대	주요 선진국
유형 C	인간 활동, 생활방식 찬성	정치적 수단 찬성 기후변화 관련 교육 찬성 에너지 수요관리 찬성 시장·경제적 수단 찬성	개인
유형 D	자본주의 시장경제 반대	국제, 국가적 대응 찬성 시장·경제적 수단 찬성 개인적 대응 반대	주요 선진국 부유한 사람 기업, 사업체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인식의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개인이 가진 문화적 편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떤 정책이 수용성이 높고, 실효성이 있는지는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의 문화적 편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추진한 국가적 수준에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겠지만, 이 연구에 의하면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이 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리는 것에 투자하기 보다는 생활방식이나 행동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이 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기

후변화 대응정책들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큰 사회나, 국가적 수준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가진 문화적 편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한다면 그 효율성과 수용성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유형에 대한 가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Q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가설추론, 가설발견 논리에 따라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유형에 대한 참가설의 제시에 있다. 이에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유형과 관련한 가설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 한국인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인식은 네 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설 2.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유형은 크게 ‘기후변화 원인’, ‘기후변화대응 수단’, ‘기후변화대응 주체’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화 된다.

가설 3. 한국의 기후변화 인식유형들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모든 인식유형이 기후변화를 의심하지 않고 실제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가설 4. 한국의 모든 기후변화 인식유형은 원자력 발전을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가설 5. 기후변화 인식은 사람들이 가진 문화적 편향에 영향을 받는다.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구에서 38명이 네 가지 유형에 속하였고, 7명은 어느 인식유형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자의 수가 많아지면 네 가지 인식유형 이외에 다른 인식유형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에 가설 1을 제시할 수 있다. 각 인식유형들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원인, 기후변화대응수단, 기후변화대응 주체의 세 가지와 관련한 진술문들을 매우 상이하게 평가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가설 2를 제시할 수 있다.

가설 3과 가설 4는 Q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합의 진술문을 통해서 제시가 되

었다. 모든 인식유형에서 11번 진술문(지금은 “기후변화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이다.)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가설 3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인식유형에서 30번 진술문(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가설 4를 제시할 수 있다.

각 인식유형의 특성을 인식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문화적 편향을 설명요인으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를 기준으로 유형 A는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의 영향을 받았다. 유형 C는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과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으며, 유형 D는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B의 경우 유형을 대표하는 문화적 편향의 확인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인식유형의 특성과 문화적 편향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른 인식유형들의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유형B도 특정 문화적 편향에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가설 5를 제시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과 연구의 함의

1. 요약

이 연구는 현재의 기후변화정도의 심각성에 대처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든스의 역설’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응모습과 인식 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해 매년 나쁜 성적들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대응모습 등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높은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소 다르다는 경험적 사실들에서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이 배제되고 합리적 선택이론에만 집중한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 방식들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위험의 사회구성주의와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후변화 인식의 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Q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유형은 ‘전사회대상 생활양식전환 추구형’, ‘소집단주도 현실개혁 추구형’, ‘개인중심 에너지 전환 추구형’, ‘원인자중심 시장기반 대응 추구형’의 네 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전사회대상 생활양식전환 추구형’은 “현재의 기후변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것이며,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은 인간의 활동과 생활방식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나 경제발전 방식이 아닌 정치적 의지를 통한 정부정책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사람의 행동에 직접적인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의 내용들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소집단주도 현실개혁 추구형’은 “지금의 정부나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방식을 비판하며 특히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시장원리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들에 매우 반대한다. 기후변화대응은 비정부, 탈경제적 방식으로 지역이나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작은 범위의 대응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의 내용을 특성으로 볼 수 있었다. ‘개인중심 에너지 전환 추구

형’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와 과학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며 내가 평소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신경을 쓴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더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은 인간 생활방식의 변화와 재생가능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수요관리, 효율성의 증대에 있다.”의 내용들을 대표적 특성으로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원인자중심 시장기반 대응 추구형’은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두지 않으며, 기후변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대응은 개인이나 지역의 작은 단위 보다 큰 단위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이에 주요 선진국, 기업이나 사업체, 부유한 사람들이 큰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성의 증대가 필수적이다.”의 내용들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유형들은 문화이론에서 제시한 문화적 편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합의 진술문들을 통해 응답자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와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론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이 기후변화는 실제적인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응답자가 원자력 발전을 기후변화 대응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다.

유형들의 특성과 각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대표적 문화적 편향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인식유형은 응답자들의 문화적 편향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었다. 유형 A의 특성은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으로 설명이 가능하였고, 유형 C의 특성은 개인주의,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설명이 가능했다. 유형 D는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으로 설명이 가능했다.

그리고 각 인식유형별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대해 시사점들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단일한 방식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유연함을 가져야 하는지 언급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Q방법론의 가설추론, 가설발견 논리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다섯 가지의 가설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인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인식은 네 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유형은 크게 ‘기후변화 원인’, ‘기후변화대응 수단’, ‘기후변화대응 주체’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화 된다.³⁴⁾ 셋째, 한국의 기후변화 인식유형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모든 인식유형이 기후변화를 의심하지 않고 실제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한국의 모든 기후변화 인식유형은 원자력 발전을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섯째, 기후변화 인식은 사람들이 가진 문화적 편향에 영향을 받는다.

2. 연구의 함의

이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기후변화의 높은 인식 수준을 다양화 했다는 것에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들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연구로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있는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만 집중해왔다.³⁵⁾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기후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심각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들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높은 인식수준과 실제 모습들의 심각한 차이를 지적하면서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주관성을 분석하였다. Q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후변화 인식은 최소 네 가지 이상의 인식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높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인식의 유형화를 통해 어떤 요소들이 기후변화 인식유형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는지 확인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45명의 응답자들은 ‘기후변화 원인’, ‘기후변화대응 수단’, ‘기후변화대응 주체’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인식유형별로 상이한 생각들을 보였다. 이는 앞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책의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

34) 표 19

35) 환경부, 2007, 2013; 오도교 외, 2010; 한현진 외, 2010; 김지현 외, 2012; 송보경 외, 2012; 채희문 외, 2011; 김옥 외, 2013 등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후변화 인식을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문화이론을 적용해 보았다는데 이 연구의 의미를 둘 수 있다. 국내에서 환경과 관련하여 문화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주로 환경갈등의 양상을 설명하고,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자들의 문화적 편향에서 찾는 연구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기후변화라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인식의 다양함을 보여 주기 위해 문화이론을 적용하였고, 문화적 편향이 기후변화 인식을 설명하는데도 유의미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넷째, 인식유형별 특성과 합의 진술문, 문화이론의 적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 인식과 관련한 가설들을 제시하여 후속 연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이 연구의 마지막 의미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기후변화인식과 관련한 참가설의 제시에 있었다. 이에 Q방법론을 통해 나온 인식유형의 특성, 합의진술문을 분석하고, 인식유형을 문화이론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다섯 개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인식과 관련한 후속연구들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언

1. 연구의 한계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Q방법론과 관련된 것으로, Q모집단의 포괄성과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Q방법론 사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Q모집단을 구축할 때, 이 연구는 논문, 사설, 성명서, 기사 등을 통해 문헌조사 하였고, 심층면접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진술문들을 수집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수집한 진술문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의견이나 생각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Q모집단의 포괄성과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연구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Q표본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석결과가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의견이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둘째, Q방법론의 특성상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45명의 응답자가 한국인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응답자들은 그들이 속한 각 사회 집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인식유형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으며, 한국인의 기후변화인식에 대해 단정 짓는 결론을 내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가지 인식유형에 속한 응답자들 이외에 7명의 응답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이는 또 다른 인식유형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인식유형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전체를 대표하는 유형이라고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2. 후속연구 제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에는 기후변화인식과 관련한 연구는 양적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기후변화인식에 대한 질적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질적연구들이 진행되어 기후변화인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의 효과와 수용성에 대한 타 분야의 질적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기후변화인식에 대한 질적연구들이 많이 진행될수록 현재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문제점들이 더 확인되고 이에 따라 실효성과 수용성이 높은 기후변화대응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들을 기초로 양적연구를 통해 가설들을 증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들은 일반적인 가설들에 비해 기각률이 낮은 참가설들이다. 이에 가설 증명을 위한 양적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연구의 결과들을 일반화 할 수 있다. 또한 양적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진다면 기후변화인식을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대응에 더 효과적인 방안들과 수용성이 높은 정책들이 구상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일반국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

일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여기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란 기후변화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났고, 현재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단순히 공익광고나 캠페인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를 느끼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피상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아닌 기후변화와 개인의 상관관계, 실천 가능한 정보나 지식의 공유 등 기후변화의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연구와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응답자들의 심층면담 내용을 정리한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위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대중들도 인식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요.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 문제는 정말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교육이 되고, 정책이 이행되었으면 좋겠어요. 폭 넓은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그 심각성을 두드러지게 인식하고 있고 뭔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인류 전체에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응답자 2

“그런 인식이 약간 더 확산되고 그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통문제로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될지 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인식자체가 조금 더 확산되고 개선되어야하지 않을까...(중략) 실천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하든지 하는 것들을... 지금은 관계가 있거나 환경운동을 하시거나 하는 분만 더 잘 알고 일상생활에서 종이를 많이 쓰지 마시다. 전기를 아끼시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중략) 어떤 법을 입안할 때 이 법인 인권적으로는 어떤지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지 보는 것처럼 환경적으로는 이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확인하고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응답자 16

“우선 정부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홍보를 많이 하고 그것과 관련된 제도를 만들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은 항상 정부에서 미는게 환경 쪽은 강조를 안하고 경제나 이런 쪽으로 강조를 하는데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중략)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라도 모여서 토론이 많아져야

하고 그리고 따라지는 결정을 서로 양보하더라도 끌고 가는 모습이 있어야 개선이 되지 계속 지금 당장 피해가 없다고 해서 미루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지불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응답자 24

“기후변화대응이라고 하는게 그 자체로만 본다면 비용일 수도 있지만, 그 대응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기후변화대응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응답자 27

“정책적인 것들 보다는 훨씬 더 공익적이고 사람들 생활에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이용하는 것들이 어떤 자원을 이용하고 있고, 어떤 환경파괴를 일으키지 실질적으로 알려주는 거지. 예를 들어 담배케이스에 적혀 있잖아 암을 유발하고 어쩌고 하는거 있잖아. 나는 사실 거기에 환경적인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야. 비용의 투자라기보다는 생활 속에 더 깊게 들어가는 분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식하게 만들어야지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는게 아니라 인식을 하게끔 만드는게 중요한거지.”

-응답자 34

“기후변화는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개인의 정확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응답자 45

참 고 문 헌

일반논문

- 강성철, 문경주(2005), “문화이론적 관점에서의 환경갈등 분석: 위천공단조성과 명지대교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9(3): 223~246
- 강종구(2009), “사회구성주의 이론의 소개 및 사회구성주의 관점을 통한 장애의 고찰”, 「시각장애연구」, 25(1): 125~142
- 김서용(2005), “환경갈등의 문화적 분석: 새만금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43~66
- (2006), “정책과정에서 전문가의 중립성에 대한 실증분석: 문화이론과 Q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한국행정학보」, 40(4): 127~153
- 김영평(1996), “문화와 위험 수용성”, 「정부학연구」, 2: 3~36
- 김옥 외(2013), “충남도민 기후변화 인식도 조사”,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 김지현, 고재경(2012),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지자체 공무원 인식 특성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4(1)
- 김홍규(2003), “Q 방법론(Q Methodology)의 정치학적 적실성과 적용 가능성”, 「주관성연구」 8: 5~19
- 박순열(2010), “한국 생태시티즌십 인식유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환경사회학회 「ECO」 14(1): 7~52
- 박종민 외(2005), “환경가치와 신념의 근원: 탈물질주의 정치이념 및 문화편향”, 「한국행정학보」, 39(4): 369~387
- 송보경 외(2012),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 오도교 외(2010),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분석: 대전광역시 산림부분 정책을 중심으로”, 「농업과학연구」, 37(1): 19~25
- 윤순진(2013), “서울 북경 동경 시민의 기후변화 위험인식 비교”, 한국환경사회학회 가을학술대회
- 이나경 외(2008), “세계관과 위험지각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 문화이론 다시보기”, 「한국심리학회지」, 27(3): 635~651
- 정태철(2010), “한국 언론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유형 Q 연구” 「주관성 연구」, 21: 89~106
- 진상현(2012),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유형 분석”, 「한국행정논집」, 24(4): 1011~1036
- 채희문 외(2011),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인식조사를 통한 적응정책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1(6): 131~138
- 한현진 외(2010), “노인집단의 기후변화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
- Anthony A. Leiserowit(2005), “American Risk Perceptions: Is Climate Change Dangerous?”, *Risk Analysis*, 25(6)
- (2006),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policy preferences: the role of affect imagery, and values”, *Climatic Change*, 77: 45~72
- (2007),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global climate change”, *Human development report*, UNDP
- Anthony A. Leiserowit et al.(2008), “Global warming's six Americas: An audience segmentation analysis”, Yale univ.
- Aaron Wildavsky & Karl Dake(1990), “Theories of risk perception: Who fears what and why?”, *Deadalus*, 119(4): 41~60, The MIT Press
- Banaszak et. al(2011), “Different perceptions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 mental model approach applied to the evidence from expert interviews”, *Reg Environ Change*, 11: 217-228
- Bruce W. Dayton(2000), “Policy frames, policy making and the global climate change discourse”, *Social discourse and environmental policy*
- Claire Marris, et al.(1998), “A quantitative test of the cultural theory of risk perceptions: Comparison with the psychometric paradigm”, *Risk analysis*, 18(5)
- Elke U. Weber(2010), “What shapes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1
- Karl Dake(1991), “Orienting Dispositions in the Perception of Risk: A analysis of contemporary world views and cultural bias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2: 61~82
- (1992), “Myths of nature: cultural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isk”,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21~37
- Kim, Seoyong(2003), “Irresolvable Cultural Conflicts and Conservation/ Development Arguments: Analysis of Korea's Saemangeum Project”. *Policy Sciences*. 36: 125-149.
- Irene Lorenzoni & Nick F. Pidgeon(2006), "Public views on climate change:

- European and USA perspectives", *Climate Change*, 77: 73~95
- Johanna Wolf et al.(2009), "Ecological citizenship and climate change: perceptions and practice", *Environmental politics*, 18(4): 503~521
- Linda Steg & Inge Sievers(2000), "Cultural Theory and Individual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Risks", *ENVIRONMENT AND BEHAVIOR*, 32(2): 250-269
- Lorraine Whitmarsh(2008), "Are flood victims more concerned about climate change than other people? The role of direct experience in risk perception and behavioural response", *Journal of Risk Research*, 11(3):
- Maria Luisa Lima & Paula Castro(2005), "Cultural theory meets the community: Worldviews and local issu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 .23~35
- Paul M. Kellstedt et al.(2008), "Personal efficacy, the information environment, and attitudes toward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in the United States", *Risk Analysis*, 28(1)
- Paul Slovic et al.(2011), "The tragedy of the risk-perception commons: cultural conflict, rationality conflict, and climate change", *Cultural Cognition Project Working Paper*, 89
- Reley E. Dunlap et al.(2000), "Measuring endorsement of the new ecological paradigm: A revised NEP scale", *Journal of social issues*, 56(3): 425~442
- Schwartz M. & Thompson M.(1990), "Divided we stand: Reading Politics, technology and social choice", Harvester-Wheatsheaf
- Susan J. Buck(1989), "Cultural theory and management of common property resources", *Human Ecology*, 19(1)
- Tansey & O'Riordan(1999), "Cultural Theory and Risk: A Review", *Health, Risk & Society*, 1: 71~90
- Timothy O'Riordan & Andrwe Jordan(1999), "Institutions, climate change and cultural theory: towards a common analytical framework", *Global Environmental Change* 9: 81~93
- Virginie Mamadouh(1999), "Grid-group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 *GeoJournal* 47: 395~409

- W. Kipviscusi & Richard J. Zeckhauser(2006), "The perception and valuation of the risks of climate change: A rational and behavioral blend", *Climatic Change*, 77: 151~177
- Wildavsky A.(1992), "Indispensable Framework or Just Another Ideology: Prisoner's Dilemma As an Antihierarchical Game", *Rationality and Society*. 4(1): 8-23

학위논문

- 강준모(2012), 한국 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의 인식유형 연구-Q방법론을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서용(2004), 환경갈등의 문화적 분석-새만금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경수(2006), 장애인복지 소지바주의 관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유형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원길연(2012), 기후재난에 대한 위험인식분석-전문가와 지역주민 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ake, K.(1990), Technology on Trial: Orientating Dispositions Toward Environmental and Health Hazards, Ph. D. Dissertation a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보고서

- 환경부(2007), "기후변화에 따른 전국민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 환경부(2013), "2013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 European Commission &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2012), "Trends in global CO2 emissions"
- IPCC(2013), "제5차 평가보고서"
- OECD(2008),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

단행본

- 김홍규(2008),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
- 노진철(2010),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 앤서니 기든스(2009), 「기후변화의 정치학」, 에코리브르
- 윤순진(2009). “제6장 기후변화,” 김은성(편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신기술
및 신종재난을 중심으로」, 법문사: 187-256.
- Helen Addams & John Proops(2000), 「Social discourse and environmental policy」,
Edward Elgar
- Thompson, M. et al.(1990). 「Cultural Theory」. Boulder: Westview Press.

부록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석사과정의 이승한이라고 합니다.
(휴대전화 : 010-9977-9171, 이-메일: seunghanlee@snu.ac.kr)

이 조사를 통해 여러분께서 기후변화와 기후변화대응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5점 척도 설문지와 46매의 진술문 카드가 있습니다. 진술문의 내용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귀하여 의견을 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내용은 순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니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 명		
나이 및 성별	만 세	
직 업	① 관리자 ②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조사자 ⑧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단순노무 종사자 세부 직업명:	
학 력		
소득수준	(가구소득) 연 만원	
참여하는 사회단체		
연락처		

문 장	선 택 란				
	매우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권위가 무시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범죄를 막기 위한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노력과 상관없이 인생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사회가 평등해지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엄한 법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6. 공정한 제도에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보다 일반국민이 내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사회적 위치와 지위에 따라 대우가 달라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잘 살고 못 살고는 결국 팔자소관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에게서 부의 평등한 사회적 분배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정상에 올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사회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성장을 항상 우선시해야 한다는 1, 환경보호를 항상 우선시해야 한다는 5로 했을 때 선생님의 생각에 가까운 번호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Q진술문 분류 지시문

여기에 46매의 진술문이 있습니다. 이 진술문은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각 카드에 있는 글을 읽으시고 그 내용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려서 분류판에 배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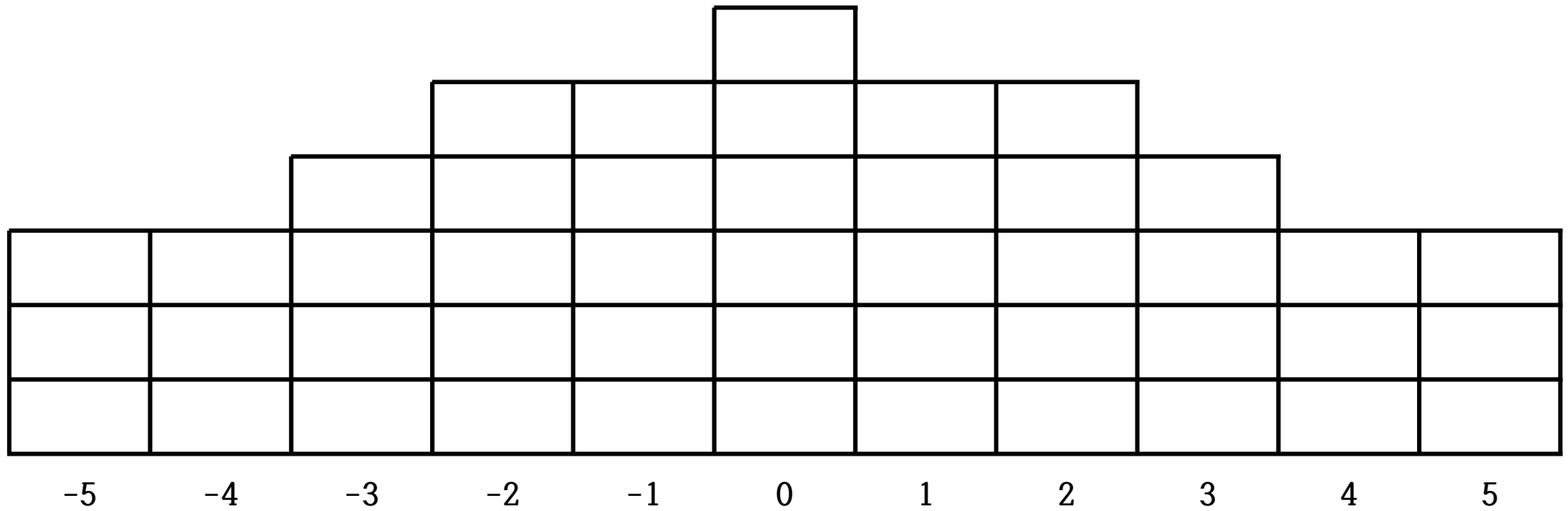
- ▶ 1단계: 각 진술문을 읽고 1차적으로 ‘찬성’, ‘중립’, ‘반대’의 세 분류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 2단계: 방금 진술문들 중 가장 찬성하는 것을 5에, 가장 반대하는 것을 -5에 분류판에 있는 수에 맞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3단계: 전체적으로 진술문을 다시 보시고 조정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4단계: 각 문장 앞의 번호를 분류판에 맞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응답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연구로 보답하겠습니다.

Q 분류표

설문번호:

성명:



부록 2. 기후변화인식 관련 Q진술문

Q진술문(Q statement) 구성

주제	진술문	분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1. 기후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생각, 태도
	2.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3. 기후변화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이다.	
	4. 기후변화는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알려지고 있다.	
	5. 기후변화정도(지구평균온도가 0.74°C 상승)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6. 훼손에 대한 강력한 복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7.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증거는 믿을만하지 않다.	과학
	8. 과도한 소비로 인해 기후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원인
	9.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활동 때문이다.	
	10. 기후변화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다.	실재여부
	11. 지금은 “기후변화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이다.	
기후변화와 개인	12. 기후변화가 심각한 것은 알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개인적 대응
	13. 나의 작은 행동변화가 기후변화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14.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정책을 따르겠다.	
	15. 나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다.	
	16. 개인보다 기업이나 사업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17. 내가 평소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기후변화의 영향	18. 최근에 발생한 이상 기후현상(이상고온, 태풍, 홍수, 폭설 등)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현재 영향
	19. 기후변화는 새로운 사회갈등을 야기 할 것이다.	
	20. 기후변화의 영향은 일부지역, 일부사람들에게만 심각한 문제이다.	
	21. 지금보다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이상기후가 더 빈번히 일어나더라도 인류는 그 상황에 적응하며 잘 살아 갈 것이다.	미래 전망
기후변화의 해결방안	22. 온실가스를 과감하게 감축할수록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대응과 경제
	23. 경제가 발전하면 기후변화는 해결될 수 있다.	
	24.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25. 기술적 발전으로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응과 기술
	26. 기후변화가 초래한 위기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대응과 정치

	27. 민주주의는 기후변화 대처에 필수적이다.	대응과 에너지
	28.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성 증대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다.	
	29. 재생가능에너지를 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30.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	
	31. 기후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활방식이 바뀌어야 해결된다.	대응과 생활방식
	32. 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선진국들이 큰 책임을 가지고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책임(기후정의)
	33. 부유할수록 기후변화 대응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	
	3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교육 및 정보의 공유
	35.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36. 기후변화 보다 더 긴급한 국제적 문제들이 있다.	시급성
	37.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별 관심을 끌지 못한다.	정책 평가
	38.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에 너무 소극적이다.	
	39.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너무 많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40. 통한 엄격한 규제만이 기후변화로 인한 파멸을 막을 수 있다.	정책 방향
	41. 전문가의 분석을 통한 결정보다는 일반국민들의 의견들이 포함된 기후변화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42. 기후변화는 국제, 국가적 수준의 대응보다 지역, 공동체적 대응이 더 효과적이다.	
	43. 기후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보다는 기후변화 적응정책부터 강구해야 한다.	
	44. 기후변화 대응은 정부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이 되어야한다.	
기타	45. 적은 비용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46. 기후변화에 대한 과감한 정책을 펼치기에는 국민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Abstract

An analysis of perception types of climate change :
Focus on Q methodology

Advised by
Prof. Yun, Sun Jin

June, 2014

submitted by
Lee, Seung Ha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jor fact in this study is the awareness of the problems of countries' responses regarding climate change: currently international community's recognition level regarding the change. In spite of their continuous efforts, currently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s has fallen to the 'Giddens's Paradox'. Korea has high perception level but has shown bad grades about corresponding to climate change every year. This study tries to point out a problem of the current corresponding ways based on the 'rational choice theory' that only focus on the perception of the majority, where other diversity of perceptions are eliminated. So, this study analyzes various perception types of climate change in Korea using the Q methodology,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onism of risk and the 'cultural theo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erception types of climate change of the 45 respondents are typified in four types—type A(Pursuing lifestyle conversion of all society), type B(Pursuing reforms of the present led by small groups), type C(Pursuing energy conversion focused on individuals), type D(Pursuing market-based correspondences focused on causers). Each type has different perspectives in terms of 'the cause of climate change', 'means of climate change response', and 'agent of climate change response'. According to consensus statements analysis, this study shows that this study shows that Korean considers climate change as a realistic and practical issue and thus a countermeasure is needed, whereas Europeans and Americans show a more skeptical behavior. Further, all perception types do not consider nuclear power as a corresponding way to climate change. Using the four 'cultural biases' proposed in the 'cultural theory' as the explanatory factors for each perception type, cultural biases are shown to be meaningful factors affecting perceptions on climate change.

This study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the effectiv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ception type, and

indicates how the current monotonous policies needs to have more flexibility.
To conclude, this study proposes five hypotheses about the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through the Q methodology.

- ◆ **Key words : climate change,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Q methodology, cultural theory**
- ◆ **Studnet number: 2012-23802**